



국내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

김준동
이성봉
김혁황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외부적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1989년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 발족하였습니다.

본 연구원은 국제거시금융, 무역통상안보, 국제개발협력, 세계지역연구 등과 관련된 문제를 조사·분석하고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연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는 [연구보고서], [연구자료], [Working Paper] 등 각종 국·영문보고서, 웹진 [오늘의 세계경제], World Economy Brief, 학술지 *East Asian Economic Review (ESCI)*,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등의 형태로 발간되고 있으며, 원문을 본 연구원 홈페이지(www.kiep.go.kr)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對外經濟政策研究院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 044-414-1114 F. 044-414-1001
www.kiep.go.kr

국내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

김준동 · 이성봉 · 김혁황

연구자료 23-07

국내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

인 쇄 2023년 12월 4일
발 행 2023년 12월 8일
발행인 이시욱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 414-1179
팩 스 044) 414-1144
인쇄처 (사)아름다운사람들(02-6948-9650)

©202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5,000원
ISBN 978-89-322-2507-4 94320
978-89-322-2064-2(세트)



2022년 우리나라의 신고금액 기준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는 304억 달러로 사상 최초로 30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나 여전히 주요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주요 선진국은 최근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있어 국내 FDI 인센티브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FDI의 최근 추이와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파악한 후 우리나라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현금지원제도 개선방안과 첨단산업 특화단지 및 기회발전특구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우리나라 FDI의 최근(2010~22년) 추이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몰타, 네덜란드 등 선진국 및 조세회피지역으로부터 투자를 많이 유치 받고 있으며,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인수합병(M&A)형보다는 사업장설립(Greenfield)형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였다.

다음으로는 미국의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EU의 유럽신산업전략, InvestEU 프로그램, 유럽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 일본의 대일직접투자 촉진 전략, 5G 촉진법과 반도체 기금, 그린이노베이션 기금, 중국의 제조업 분야 외자유치 확대 정책 등 최근 주요국의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하여 주요국의 경우 ① 내외국인 차별 없는 투자 인센티브 제도 운영 ② 거액의 투자보조금 지원 ③ 대규모 지원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특징을 바탕으로 ‘현금지원제도 확충 및 개선’과 ‘첨단산업 특화단지 및 기회발전특구 활용’을 국내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현금지원제도 확충 및 개선 방향의 경우 ① 현금지원 예산 규모의 확대 ② 소프트웨어 측면의 연구개발 지출에 대한 지원 확대 ③ 고용 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을 함께 고려한 현금지원 규모 산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전략산업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 특화단지와 기회발전특구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문요약	3
제1장 서론	10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0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1
3. 연구의 구성	17
제2장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최근 추이	18
1. 신고 및 도착 기준	18
2. 국가별 추이	20
3. 산업별 추이	23
4. 형태별 추이	27
제3장 주요국의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30
1. 미국	30
가.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30
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33
2. EU	36
가. 유럽신산업전략	36
나. InvestEU 프로그램	39
다. 유럽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	41
3. 일본	43
가. 대일직접투자 촉진 전략	44
나. 5G 촉진법과 반도체 기금	46

다. 그린이노베이션 기금	48
4. 중국	49
제4장 정책적 시사점	53
1. 현행 투자 인센티브 주요 내용 및 한계점	53
2.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	55
가. 전략산업 투자 인센티브 외국사례 시사점	55
나.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	56
참고문헌	61
부록	65
Executive Summary	67



표 차례

표 1-1. 주요국의 GDP 대비 FDI 저장(stock) 비율	10
표 2-1. 주요국별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21
표 2-2. 한국 외국인직접투자의 산업별 비율	23
표 2-3. 주요 중분류 산업별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25
표 2-4. 주요 중분류 산업에 대한 상위 투자국	26
표 2-5.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최근 대표적 투자 사례	27
표 2-6. 우회투자 예상 실시 및 이용 대상국 비교	29
표 3-1. 미국 'CHIPS and Science Act' 인센티브 내용	31
표 3-2. IRA 청정자동차 세액공제 수혜 조건	34
표 3-3. EU 신산업전략의 핵심 분야별 추진 전략	37
표 3-4. InvestEU Fund의 주요 내용	39
표 3-5. 유럽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의 주요 내용	41
표 3-6. 일본의 전략산업 투자유치 주요 시책	45
표 3-7. 일본 반도체 기금 현황	47
표 3-8. 일본 그린이노베이션 기금 사업	48
표 3-9. 중국의 제조업 중심 외자유치 확대 정책의 주요 내용	49
표 3-10. 중국의 장려산업 목록 확대 및 투자 인센티브 내용	51
표 4-1. 첨단전략산업 분야 현금지원제도 개정 전후 비교	54



그림 차례

그림 2-1.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19
그림 2-2.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24
그림 2-3. 형태별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28



부록 표 차례

부록 표 1. 주요국의 GDP 대비 FDI 유량(flow) 비율	65
---	----



부록 그림 차례

부록 그림 1.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통계 작성 흐름	66
부록 그림 2. 자료원별 우리나라의 M&A형 투자 추이 비교	66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022년 신고금액 기준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304억 달러로서 사상 최초로 300억 달러를 초과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FDI 유치실적은 [표 1-1]과 같이 중국과 일본보다는 높으나 여전히 주요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표 1-1. 주요국의 GDP 대비 FDI 저장(stock) 비율

(단위: %)

국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한국	11.8	10.8	12.3	13.2	12.1	12.2	12.6	14.1	13.8	14.6	16.2	14.6
한국 순위	162	169	163	173	181	184	185	180	184	184	180	181
G7	22.9	22.1	24.4	27.3	27.8	28.8	30.4	35.1	32.3	37.7	43.9	48.3
미국	22.6	22.3	23.9	29.2	30.9	31.3	34.6	39.9	35.6	43.6	51.5	58.9
일본	3.7	3.6	3.3	3.3	3.5	3.9	3.9	4.1	4.1	4.3	4.6	5.2
영국	42.9	43.3	53.0	54.0	51.2	51.8	53.6	69.7	68.8	71.0	80.3	82.4
EU	41.0	39.3	45.2	45.8	45.8	54.3	53.1	59.0	53.5	57.0	77.9	68.1
프랑스	23.8	24.4	25.3	27.0	24.5	28.1	28.0	31.5	28.9	31.2	36.5	33.2
독일	28.1	26.6	30.5	25.9	22.1	23.3	22.9	26.1	23.6	24.8	28.8	26.9
G20	26.7	24.7	26.9	28.7	29.0	30.7	32.2	35.4	32.6	36.5	44.1	43.3
중국	9.6	9.4	9.8	10.0	10.4	11.0	12.1	12.1	11.7	12.4	13.0	11.9
인도	12.3	11.0	12.1	11.8	12.4	13.2	13.9	14.4	14.0	14.8	18.0	16.2
대만	13.8	11.1	11.8	12.5	12.7	12.2	13.6	13.9	13.9	16.1	16.5	14.8
ASEAN	57.7	55.3	61.3	64.2	69.7	74.0	75.1	82.4	81.4	86.9	100.9	97.0
전 세계	30.0	27.9	30.4	32.2	32.8	35.4	37.3	40.8	38.1	41.7	49.0	47.3

주: 1) 음영은 한국보다 비율이 낮은 국가를 표시함.

2) 주요국의 GDP 대비 FDI 유량(flow) 비율은 [부록 표 1] 참고.

자료: UNCTADstat, Data Cente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3. 6. 1).

한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GDP 대비 높은 외국인직접 투자 저장 비율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여 국내 외국인직접 투자 인센티브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분석·평가하여, 국내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현금지원제도 확충 및 개선방안과 첨단산업 특화단지 및 기회발전특구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이와 유사한 투자보조금 중에서도 고용보조금과 혁신보조금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정형곤, 이아라(2022)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최신 외국인투자 정책을 국내산업 보호와 GVC 재편 차원에서 분석하고, 우리 정부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 정책이 나아갈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정책방안으로서는 임대료 감면제도의 활용을 확대하고, 현행 교부형 현금지원제도에 ‘대여형’ 또는 ‘기금형’ 현금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제도를 보완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김준동 외(2009)에서는 국내 외국인직접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특히 법률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방송서비스 등의 분야에서의 개방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는데, 투자 인센티브와 관련하여서는 현금지원제도 확대와 조세감면제도 축소라는 기본원칙하에 역차별을 해소하는 장기적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예상준 외(2021)에서는 조세회피 목적의 소득이전과

세원잠식 문제, 일명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문제를 해결하고자 OECD와 G20을 포함한 140여 개국이 참여하는 다자논의기구인 '포괄적 체계(Inclusive Framework)'의 출범으로 글로벌 단위 다국적기업의 실효 세율 부담을 최저 15%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필라 2의 도입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필라 2를 도입하는 경우 미국과 중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의 세후이익 감소와 그로 인한 R&D 투자 위축으로 교역이 감소하면서 두 나라로부터의 투자 유입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필라 1, 2를 모두 도입할 경우 투자 유입 효과가 더 커 전반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Chor(2009)는 기업의 생산성이 이질적인 상황에서 다국적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보조금의 후생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소규모 보조금의 사용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유치로부터 얻는 소비 이득이 보조금 프로그램의 재원을 조달하는 데 드는 직접적 비용을 초과함으로써 현지국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Wu, Chen, and Chang(2019)에서도 현지 기업들의 생산성이 서로 다르다면 소규모의 FDI 보조금제도가 소비의 이득 및 단기적인 후생 향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조금 프로그램이 현지국의 외국 생산자들에게만 지급되는 대신에 모든 국내 생산자들에게 지급될 경우 후생 증가를 가져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모든 국내 생산자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현지국으로부터 얻는 모든 국내 생산자들의 이익을 증가시킴으로써 이익 전환 효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현지국 기업 수의 감소가 작아져서 현지국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용보조금은 고용주들에게 고용을 증가시키거나 노동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특정 그룹의 근로소득을 증가시키도록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수요 측면의 노동시장 개입 정책이다.¹⁾ 정부가 재원을 제공하지만 채용 및 해고는 궁극적으로 민간 기업들에 달려 있다. 이러한 정의는 인구의 특정 그룹에 대한

1) Cronert(2019), p. 841.

전 분야에 걸친 급여세 감면이나 저임금 고용충을 위한 소득세액공제와 같은 일반적이고 비선별적인 고용 개입 정책이나 재정 개입 정책과는 구별된다. 또한 재고용 보너스, 이동 보조금 및 보육수당과 같은 선별적인 공급 측면의 보조금도 고용주의 채용 행동보다는 노동자의 구직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서와 같은 고용보조금의 정의에서는 벗어난다.

고용보조금의 형태는 일반적 고용보조금과 채용보조금으로 나뉜다. 일반적 고용보조금은 총 소득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한 기업에서의 모든 타깃 그룹 노동자들의 근로시간 중 일부를 보조하는 것을 가리킨다. 한편 채용보조금은 기업의 총 고용에 반해 신규로 채용된 노동자들의 소득의 일부나 소요된 근로시간의 일부에 대해 지불된다.

Brown, Merkl, and Snowden(2011)는 서로 다른 형태의 고용보조금이 고용, 후생 및 불평등에 미치는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독일 데이터를 사용하여 미시적 기초에 근거한 동태적 추정을 하였는데, 그 결과 쿠폰 형태의 채용보조금이 후생 효율적인 반면, 저임금 근로자를 타깃으로 한 보조금은 후생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 실업자에 대한 쿠폰 형태의 채용보조금이 저능력 근로자를 타깃으로 한 것보다 효과적이라는 추정 결과를 보였다.

Cronert(2019)는 고용보조금이 서로 상이한 분배목적에 대한 수단으로서 다목적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계량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고용보조금이 노동시장의 내부자·외부자 격차에 대응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를 유지하기 위해 고안될 수 있고, 구조적 노동시장 문제나 경기순환적 노동시장 문제를 다루기 위해 고안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Cerqua and Pellegrini(2022)에서는 이탈리아의 기업들과 노동자들에 대한 행정 데이터를 사용하여 보조금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신규 채용의 대다수가 특히 젊은이와 학생 등 노동시장에의 신규 진입자로부터 발생하였으며, 보조금 수혜 기업들이 그들의 가장 가치 있는

직원들을 유지하고 보다 역량 있는 젊은이들을 채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외솔, 송승주(2020)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고용정책의 하나로 논의되는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임금보조금(wage subsidies) 지급의 거시경제 효과를 우리나라 경제를 대상으로 모의실험을 통해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면 재정승수는 1보다 큰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Delvic(2020)은 체제전환국의 하나인 세르비아의 사례를 분석하여 FDI 정책이 산업 내 특정 활동에 집중해야 하며, FDI 유입은 장려되어야 하나 금융보조금으로는 국내 산업에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²⁾ 이에 동 연구에서는 지식기반 활동에 우선순위를 두고,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공동 재원조달 등을 통해 고도성장 산업에서의 노동자 훈련을 장려하며, 투명하고 통일된 규칙을 제공할 것을 정책 당국에 권고하였다.

Kim and Lee(2019)에서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경기의 악영향을 받은 한국의 통영지역에 대해 2013년과 2014년에 도입한 긴급 고용보조금으로서의 특별 고용촉진 지역(SEPZ: Special Employment Promotion Zone Program) 프로그램의 유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동 프로그램은 첫 해에는 완전히 활용되지 못하여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두 번째 해에는 주로 비제조업 분야에서 고용률을 상승시킨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고용 증대 효과의 크기는 작았으나, 동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도 그 효과가 지속되었다.

Yeldan(2017)에서는 연산가능 일반균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형태의 일반균형모형을 사용하여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튀르키예의 고용보조금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는데, 다소 제한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균형적이고 취약한 거시경제적 환경에서

2) FDI의 결정요인으로서의 보조금, FDI와 경제발전, 현지의 흡수능력과 보조금을 지급받은 FDI의 관계 등과 관련한 기존 문헌의 서베이에 대해서는 Delvic(2020) 제2절 참고(pp. 35~42).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실질환율의 비정렬(mis-alignment)이 튀르키예 통화의 심각한 절상을 가져왔고, 대외 적자의 증가와 총생산성의 감소가 이러한 빈약한 거시경제 성과에 더해졌다. 따라서 거시경제적 균형이 유지되고 보다 경쟁적인 환율이 추구될 수 있다면 동일한 규모의 고용보조금으로 총고용이 세 배 이상 증가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혁신보조금의 일환으로서 R&D 보조금과 관련해서 Brautzsch *et al.* (2015)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독일의 R&D 보조금이 고용과 생산에 미치는 거시경제적 효과를 개방경제의 투입-산출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보조금 수혜를 받은 R&D 프로그램은 초기 지급액의 2배 이상에 달하는 생산, 부가가치, 고용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R&D 프로그램이 2009년도에 GDP 감소를 0.5% 상쇄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R&D 보조금의 효과에 대한 기업 차원의 분석은 그동안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다. 특히 정부의 R&D 지원 정책 중에서도 보조금 지원이 기업 R&D 투자를 촉진 또는 대체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승용, 임종빈, 정상양(2017)에서는 R&D 보조금 지원 효과를 기업의 기술 수준과 자체 R&D 투자 정도를 고려하여 보다 면밀히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첨단기술과 중저기술 산업 모두에서 정부 R&D 보조금이 기업의 자체 R&D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기술의 경우 기업의 R&D 투자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분위에서 정부 R&D 보조금 지원이 자체 투자를 촉진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첨단기술 기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R&D 집약도가 높기 때문에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자체 R&D 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저기술 산업의 경우 자체 R&D 투자 수준이 50% 이하인 기업에서는 R&D 투자를 촉진하였지만, 자체 R&D 투자를 많이 하는 상위 70% 이상인 기업에서는 유의미한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곽기현, 여영준, 정성문(2017)에서는 R&D 프로젝트의 주요 특성인 투자비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감안하여, 기업의 R&D 투자 촉진 정책인 투자보조금 지급과 세제 혜택의 효과를 실물옵션 이론을 통해 분석하였다. 투자보조금 지급 정책에 비해 세제 혜택의 경우 기업의 할인율이 감소할수록 R&D 투자 촉진 효과가 더 커짐을 확인하였다.

Guo and Zhang(2022)에서는 중국의 중소규모 기술 기반 기업(SMTEs)을 위한 혁신보조 프로그램과 중소규모 기술 기반 기업에 대한 혁신펀드(Innofund)의 패널 데이터를 기초로 정부의 혁신보조금으로부터의 산업 내 및 산업 간 파급효과(spillover effects)에 관해 다음과 같은 새로운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i) Innofund 보조금은 수평적으로나 수직적으로 유의미한 파급효과가 있다. (ii) 높은 시장화(marketization) 수준을 가진 지역에서 파급효과가 보다 큰 경향을 갖는다. (iii) 2005년도에 중앙집중으로부터 지방화(decentralization)로 정책이 변화하면서 지방화 개혁이 Innofund의 파급효과를 증대시켰다. (iv) 한편 고도기술 서비스산업에 대한 보조금의 파급효과를 최초로 분석하였는데, 제조업의 상하방 부문의 성장에 모두 강한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Mulier and Samarin(2021)은 범유럽의 혁신 프로그램인 Horizon 2020³⁾ 체계를 사용하여 혁신보조금이 기업의 성과와 혁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한 혁신보조금의 동태적 효과 및 혁신보조금 효과의 분야별 이질성(sector heterogeneity)의 두 가지 측면에 집중하였다. 동태적 효과에 관한 분석 결과는 우선 보조금의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해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한편 혁신을 나타내는 무형자산, 특히 신청 수 등에 미치는 효과는 (t+1) 연도에 비해 (t+5) 연도에 4~6배가량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의 경우 보조금의 영향은 보다 즉각적으

3) Horizon 2020은 연구와 혁신을 위한 EU의 가장 큰 프로그램으로서, 유럽의 연구 프로젝트를 위해 800억 유로의 규모로 2013년 12월에 출범하였다. 동 프로그램의 글로벌 목표는 과학 연구와 혁신의 확산을 증진시키고, 경쟁력을 제고하며, 경제성장과 투자 및 고용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첫 3개년간 5만 8,000여 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하여 200억 유로의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로서, (t+5) 연도의 효과가 (t+1) 연도보다 2배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매출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t+4) 연도에 정점에 달하고, 그 후로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이질성에 관한 분석 결과로는 혁신보조금은 R&D 집약적인 분야와 지식집약적인 분야 및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분야에서 유형자산, 매출 및 고용에 긍정적이고도 유의미한 영향을 가져왔다.

3.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우선 제2장에서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최근 추이를 2010~22년 기간 동안의 통계로 분석한다. 신고기준 및 도착기준을 구별해서 살펴보고, 산업별 추이, 규모별 추이, 그린필드(Greenfield)와 인수합병(M&A: Mergers and Acquisitions)을 구분하여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제3장의 분석을 토대로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 |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최근 추이

1. 신고 및 도착 기준⁴⁾

신고금액 기준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2012년(163억 달러) 처음으로 150억 달러를 돌파하며 증가추이를 가졌으나, 엔저 등으로 일본의 대한국 직접투자가 위축됨에 따라⁵⁾ 2013년 145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2014년에 바로 반등한 외국인직접투자는 2015년(209억 달러)에 처음으로 20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유지 및 국내 대기업과의 협력수요 증대⁶⁾ 등에 힘입어 2018년(269억 달러)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혜택 폐지⁷⁾ 및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경제위기⁸⁾ 인해 2019~20년 외국인직접투자는 크게 감소하였다. 2021~22년 외국인직접투자는 글로벌 경기회복의 기대감 상승, 우리나라의 튼튼한 제조업 기반, 대형 국책사업 연계 유치로⁹⁾ 다시 증가하였으며, 특히 2022년 외국인직접투자는 304억 달러로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도착금액 기준 외국인직접투자는 [그림 2-1]과 같이 전반적으로 신고금액 기준과 유사한 증감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2015년 이후 150억 달러 수준에서 증

4) 신고금액 기준 외국인직접투자는 외국인투자신고서를, 도착금액 기준 외국인직접투자는 송금 내역을 바탕으로 집계된다[산업통상자원부(2021a), pp. 2~3]. 외국인직접투자통계 작성 흐름은 [부록 그림 1]과 같다.

5)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4), 「2013년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 145.5억불, 도착 96.8억불」, pp. 1~2.

6)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8), 「2017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p.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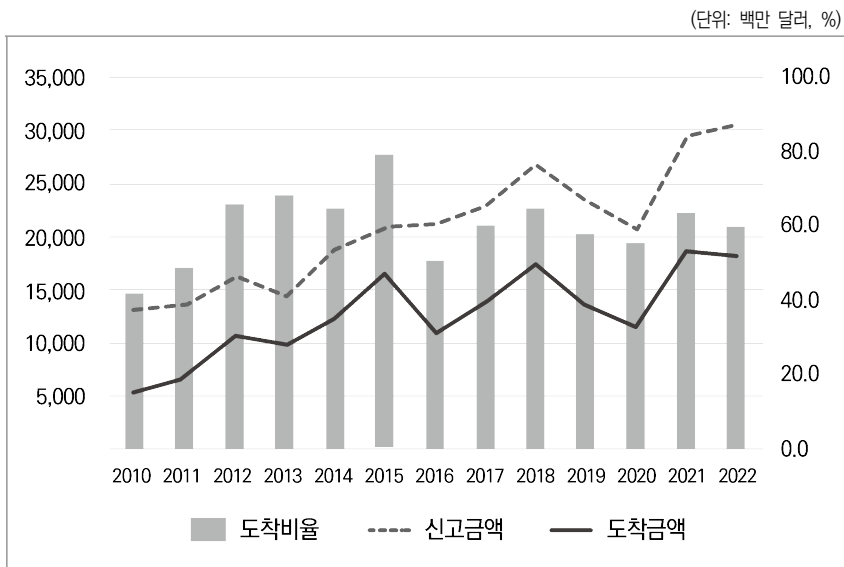
7)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0), 「2019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p. 3.

8)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1b), 「2020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p. 2.

9)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1c), 「2021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pp. 2~3;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3a), 「2022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p. 2.

감을 반복하며 횡보하는 양상을 보인다. 도착금액 기준 외국인직접투자가 신고 금액과 비교하여 가지는 가장 큰 차이점은 2016년 및 2022년 외국인직접투자가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이다. 특히 2016년 도착금액은 108억 달러로 2015년 (167억 달러)에 비해 35.0%(58억 달러) 감소하였다. 이는 신고와 동시에 투자금이 유입되는 인수합병(M&A)형 외국인직접투자가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¹⁰⁾ 한편 신고금액 대비 도착금액 비율은 증가추이를 가지며 2015년 79.8%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기간에서는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림 2-1.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주: 1) 도착비율은 신고금액 대비 도착금액 비율임.

2) 금액은 왼쪽, 비율은 오른쪽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3. 5. 25).

본 장의 이후 절에서는 실제 우리나라로 송금된 도착금액을 이용하여 국가별, 산업별, 형태별 외국인직접투자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10)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7), 「2016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p. 5. 실제 M&A형 외국인직접투자는 2015년 89억 달러에서 2016년 34억 달러로 크게 감소하였다(그림 2-3 참고).

2. 국가별 차이

2010~22년 도착금액 기준 주요국별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를 나타낸 [표 2-1]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한국은 미국, 일본, 싱가포르, 몰타, 네덜란드로부터 투자유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5개국 이외에 영국, 케이만군도, 홍콩 등도 한국의 주요 투자국에 해당하나 미국, 일본, 싱가포르, 몰타, 네덜란드는 다수의 기간에서 한국의 상위 5대 투자국에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2010~14년 중 한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실시한 일본으로부터의 직접투자가 최근 뒤처지는 양상을 보인다. 즉 2012년 38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일본으로부터의 투자는 2020년 6억 달러까지 하락하는 추이를 보인다. 이후 최근 3년(2020~22년) 중 일본으로부터의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일본은 여전히 한국의 상위 5대 투자국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싱가포르, 몰타, 네덜란드, 케이만군도, 홍콩과 같은 조세회피지역으로부터 많이 유입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 몰타, 네덜란드로부터의 2010~22년 평균 투자는 한국의 상위 2대 투자국인 미국 및 일본으로부터의 투자와 큰 차이가 없다. 이들 조세회피지역의 경제 규모를 고려했을 때 이들 국가로부터의 투자는 다른 국가로부터의 투자가 우회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¹¹⁾

한편 특정 연도에서 일부 국가로부터의 투자가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2015년 중국,¹²⁾ 2018년 호주 및 스페인, 2020년 캐나다,¹³⁾ 2021년 독일¹⁴⁾로부터의 투자가 이에 해당한다.

11) 우회투자 가능성은 본장 4절 형태별 추이에서 다시 논의한다.

12) 한·중 FTA 및 한류 기대효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6. 1. 6), 「2015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신고 209.1억 달러, 도착 159.5억 달러 기록」, p. 2].

13) 코로나19로 인한 의학·바이오 투자와 그린뉴딜 분야에 대한 투자 증가[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1b), 「2020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pp. 4~5].

14) 독일의 Delivery Hero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지분 100% 인수(Eicon,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3. 6. 1).

표 2-1. 주요국별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주요 투자국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평균
전 세계	5,452	6,656	10,743	9,890	12,353	16,680	10,847	13,820	17,514	13,449	11,488	18,690	18,160	12,749
EU	2,156	2,467	2,808	3,457	4,242	4,268	3,652	4,773	5,321	5,154	3,532	7,089	6,627	4,273
ASEAN	408	548	1,085	516	1,709	2,482	2,141	1,311	1,093	1,198	1,905	3,698	2,440	1,580
미국	330 (4)	432 (5)	1,230 (2)	1,603 (2)	1,809 (3)	2,363 (1)	1,518 (3)	1,249 (6)	3,842 (1)	1,409 (4)	1,041 (4)	2,525 (2)	2,729 (3)	1,699 (1)
일본	1,434 (1)	1,468 (1)	3,848 (1)	2,889 (1)	2,269 (1)	1,226 (5)	808 (6)	1,278 (5)	1,036 (7)	1,192 (5)	599 (7)	764 (9)	1,124 (6)	1,533 (2)
싱가포르	317 (6)	442 (4)	968 (3)	454 (6)	1,647 (4)	2,334 (2)	2,113 (1)	1,150 (7)	1,066 (6)	1,132 (6)	1,855 (2)	3,586 (1)	2,411 (4)	1,498 (3)
몰타	183 (8)	239 (8)	904 (4)	1,100 (3)	460 (6)	1,221 (6)	1,541 (2)	1,963 (1)	2,356 (2)	1,541 (3)	2,087 (1)	2,006 (4)	1,552 (5)	1,319 (4)
네덜란드	982 (2)	799 (3)	548 (5)	768 (4)	557 (5)	2,298 (3)	1,083 (4)	1,462 (3)	294 (14)	2,323 (1)	536 (8)	793 (8)	4,368 (1)	1,293 (5)
영국	623 (3)	235 (9)	264 (10)	99 (14)	369 (10)	288 (13)	206 (12)	1,939 (2)	315 (12)	2,034 (2)	451 (10)	930 (6)	535 (7)	638 (6)
케이만군도	73 (15)	209 (10)	266 (9)	217 (11)	202 (15)	384 (10)	339 (8)	219 (14)	503 (11)	690 (8)	1,020 (5)	940 (5)	2,819 (2)	606 (7)

표 2-1. 계속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주요 투자국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평균
홍콩	50	170	348	131	410	855	938	1,282	1,085	802	849	600	333	604
	(17)	(11)	(7)	(12)	(8)	(9)	(5)	(4)	(5)	(7)	(6)	(11)	(9)	(8)
독일	211	935	368	249	292	302	208	412	104	452	340	2,315	228	493
	(7)	(2)	(6)	(9)	(12)	(12)	(11)	(9)	(20)	(9)	(11)	(3)	(11)	(9)
중국	96	101	188	229	319	1,774	481	202	791	189	228	360	211	398
	(11)	(13)	(16)	(10)	(11)	(4)	(7)	(15)	(8)	(12)	(12)	(14)	(12)	(10)
캐나다	12	367	200	307	29	902	76	284	257	116	1,065	694	488	369
	(25)	(7)	(15)	(7)	(23)	(8)	(18)	(10)	(15)	(16)	(3)	(10)	(8)	(11)
룩셈부르크	7	27	247	722	1,922	184	162	220	147	120	211	268	157	338
	(28)	(23)	(11)	(5)	(2)	(15)	(14)	(13)	(18)	(15)	(13)	(15)	(14)	(12)
아일랜드	321	65	268	77	444	19	293	242	310	174	20	914	31	244
	(5)	(17)	(8)	(17)	(7)	(24)	(9)	(12)	(13)	(13)	(26)	(7)	(21)	(13)
호주	5	4	16	28	124	27	36	36	2,004	54	5	53	102	192
	(30)	(36)	(21)	(22)	(18)	(23)	(20)	(21)	(3)	(19)	(32)	(22)	(17)	(15)
스페인	88	25	6	11	8	7	176	7	1,389	3	10	12	30	136
	(13)	(24)	(28)	(30)	(29)	(28)	(13)	(31)	(4)	(39)	(30)	(31)	(22)	(17)

주: 평균은 2010-22년 평균임. 괄호 안은 순위를, 음영은 연도별 상위 5개국을 표시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3. 5. 25).

3. 산업별 추이

2010~22년 평균 한국의 전 산업 투자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33.7%와 63.9%로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주도하고 있다(표 2-2 참고). 2018년 이전에는 다수의 연도에서 제조업 비율이 40%를 초과하였으나 2020년 및 2021년 제조업 비율은 20% 미만을 기록하는 등 최근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주춤하는 모습이다.

표 2-2. 한국 외국인직접투자의 산업별 비율

(단위: %)

산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농축수산물 및 광업	0.0	0.0	0.1	0.1	0.0	0.0	0.5	0.0	0.1	0.0	0.3	0.0	0.0	0.1
제조업	43.5	45.1	40.1	43.8	40.5	30.5	26.3	40.6	40.0	36.7	19.4	15.8	34.2	33.7
전기가스, 수도, 환경정화, 건설업	1.4	0.7	1.2	0.3	0.5	7.9	1.3	1.2	0.6	5.7	2.7	1.7	2.0	2.3
서비스업	55.1	54.2	58.5	55.8	59.0	61.5	71.9	58.2	59.3	57.5	77.6	82.6	63.8	6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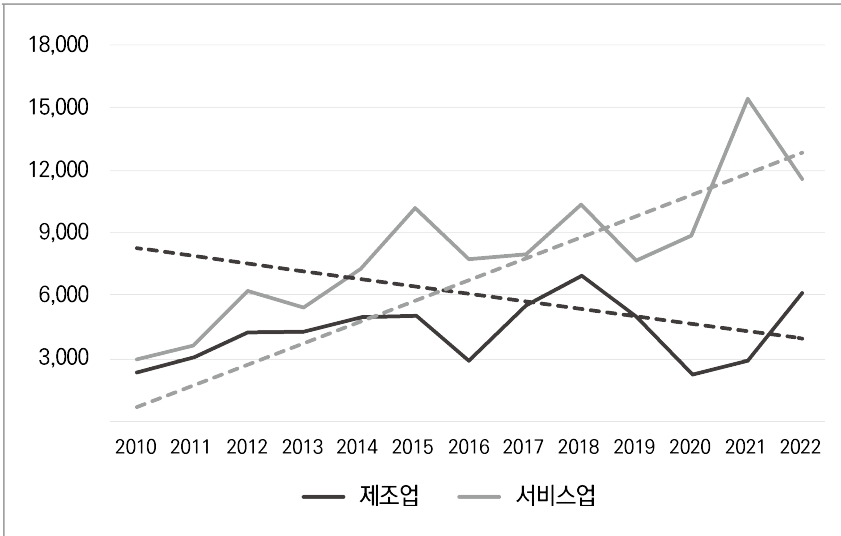
주: 평균은 2010~22년 평균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3. 5. 25).

[그림 2-2]에 의하면 2018년까지 유사한 증감추이를 보이던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투자는 이후 기간부터 달라지고 있다. 2018년 70억 달러이던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2020년 22억 달러까지 감소한 이후 2022년 62억 달러로 회복하였다. 그러나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2018년 104억 달러에서 2021년 154억 달러까지 증가한 이후 2022년 116억 달러로 회귀하였다. 전반적으로 2018년 이후 제조업 투자는 감소추이를, 서비스업 투자는 증가추이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2.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주: 점선은 2018~22년 투자에 대한 추세선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3. 5. 25).

[표 2-3]에 의하면 분석기간 중 제조업 투자는 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② 자동차 및 트레일러에서, 서비스업 투자는 ① 금융 및 보험업 ② 정보통신업 ③ 도소매업에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투자의 경우 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②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③ 기타 기계 및 장비 ④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상위 5개 산업에 다수 포함되었다. 다만 2010~22년 평균 투자가 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② 자동차 및 트레일러 ③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④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상위 5개 산업에 다수 포함된 산업과 일부 차이가 있다.

한편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은 2015년, 2019년, 2022년 등 특정 연도에 투자가 집중되어 나타나는 특징이, 2021년 정보통신업에 대한 투자 역시 63억 달러로 여타 연도 및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특징이 발견되었다.

표 2-3. 주요 중분류 산업별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산업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평균
제조업 소계		2,373	3,002	4,312	4,328	5,004	5,090	2,854	5,611	7,012	4,941	2,227	2,944	6,204	4,300
식료품		17	140	60	35	87	172	49	138	39	265	16	364	201	122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62		231	80	94	304	18	56	1	1	40	3	104	77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1	11	21	75	1,924	12		6	1,181	8	1	3,113	48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244	807	1,059	655	1,026	1,218	825	1,483	1,197	1,676	881	588	498	935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629	37	82	345	67	93	61	235	17	236	29	28	37	146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42	8	131	130	204	97	129	699	71	269	92	12	55	149
비금속 광물제품		171	91	192	1,026	2,204	3	2	100	88	11	29	43	21	306
1차 금속		133	390	169	85	61	71	61	318	37	43	26	67	57	1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523	420	632	267	362	408	431	909	122	359	313	506	608	451
전기장비		202	166	196	109	53	171	196	310	395	165	82	131	245	186
기타 기계 및 장비		187	256	291	139	350	281	369	366	254	249	198	328	385	281
자동차 및 트레일러		60	495	943	1,246	127	222	551	657	4,573	291	404	531	437	810
서비스업 소계		3,003	3,605	6,287	5,523	7,291	10,259	7,796	8,039	10,391	7,733	8,915	15,430	11,593	8,143
도소매업		670	777	1,159	698	900	1,040	1,097	1,104	1,331	2,101	584	1,644	2,143	1,173
운수 및 창고업		193	107	44	46	161	471	308	174	146	60	212	119	517	197
숙박 및 음식점업		23	33	143	350	595	585	485	833	361	402	53	112	82	312
정보통신업		380	484	1,015	596	1,481	921	1,681	899	2,860	1,543	1,300	6,344	2,981	1,730
금융 및 보험업		964	1,381	2,889	2,284	2,843	5,652	2,747	3,234	3,565	2,167	4,849	4,071	4,236	3,145
부동산업		347	387	401	397	516	614	1,030	1,015	1,268	982	1,106	1,141	978	78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97	288	428	1,032	581	608	250	668	215	314	494	601	477	48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업		54	14	71	61	160	73	86	74	393	59	97	982	17	165

주: 평균은 2010~22년 평균이며, 음영은 상위 5개 산업을 표시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3. 5. 25).

최근 5년(2018~22년) 평균 투자금액을 이용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주요 중분류 산업에 대한 상위 투자국을 [표 2-4]와 같이 살펴보았다. 이에 의하면 [표 2-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싱가포르, 케이만군도 등이 상위 투자국에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외 일부 산업에서 특정 국가로부터 투자가 집중되어 유치되는 특징이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투자의 대부분은 네덜란드로부터, 금융 및 보험업 투자의 34.8%는 몰타로부터 이루어졌다.

표 2-4. 주요 중분류 산업에 대한 상위 투자국

(단위: 백만 달러)

산업	1위국		2위국		3위국		전 세계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제조업	네덜란드	1,100	미국	589	일본	385	4,66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네덜란드	856	일본	6	싱가포르	1	86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영국	301	미국	160	쿠웨이트	91	968
전자부품 등	네덜란드	160	미국	109	케이만군도	40	382
기타 기계 및 장비	일본	75	미국	41	중국	35	283
자동차 및 트레일러	호주	348	스페인	278	미국	165	1,247
서비스업	싱가포르	1,938	몰타	1,759	미국	1,719	10,812
도소매업	미국	412	몰타	177	케이만군도	147	1,561
정보통신업	미국	1,035	싱가포르	631	독일	436	3,005
금융 및 보험업	몰타	1,316	싱가포르	566	케이만군도	566	3,778
부동산업	싱가포르	513	홍콩	222	캐나다	133	1,09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싱가포르	106	미국	56	영국	56	420
전 산업	미국	2,309	싱가포르	2,010	몰타	1,908	15,860

주: 2018~22년 평균 투자액을 이용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3. 5. 25).

한편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전기차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표적인 투자 사례를 [표 2-5]와 같이 정리하였다. 이에 의하면 최근으로 올수록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업장설립(Greenfield)형보다 인수합병(M&A)형 투자에서 투자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는 미국, 중국, EU 등으로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표 2-5.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최근 대표적 투자 사례

(단위: 백만 달러)

투자연도	투자기업	투자국	투자형태	사업분야	투자금액
2018년	Biogen	미국	M&A	의약품	678.4
	Aptiv PLC	아일랜드	M&A	자동차 부품	500.2
2019년	JCET(장전과기)	중국	Greenfield	반도체 제조	340.7
2020년	Continental AG	독일	M&A	전기차	200.4
	Vultr	미국	Greenfield	클라우드 컴퓨팅	118.2
	FIMER	이탈리아	Greenfield	태양광	153.8
2021년	Blackrock Real Assets	미국	M&A	태양광	100.0
	AT&S	오스트리아	Greenfield	인쇄회로기판	340.7
	Imeik Technology Development	중국	M&A	의약품	137.4
	Magna Metalforming GmbH	캐나다	M&A	전기차	451.7
	Shanjin Optoelectronics	중국	M&A	디스플레이	700.4
2022년	Axcelis Technologies	미국	Greenfield	반도체 장비	340.7
	Ignyte Acquisition	미국	M&A	바이오	180.0
	Aphrodite Acquisition Holdings	싱가포르	M&A	바이오	1,299.1
	BCPE Centur Investments	케이만군도	M&A	의료기기	559.7
	Air Products Korea	미국	M&A	반도체	117.2

주: 투자연도는 투자가 완료된 연도이며, M&A의 투자국은 인수기업의 모기업이 위치한 국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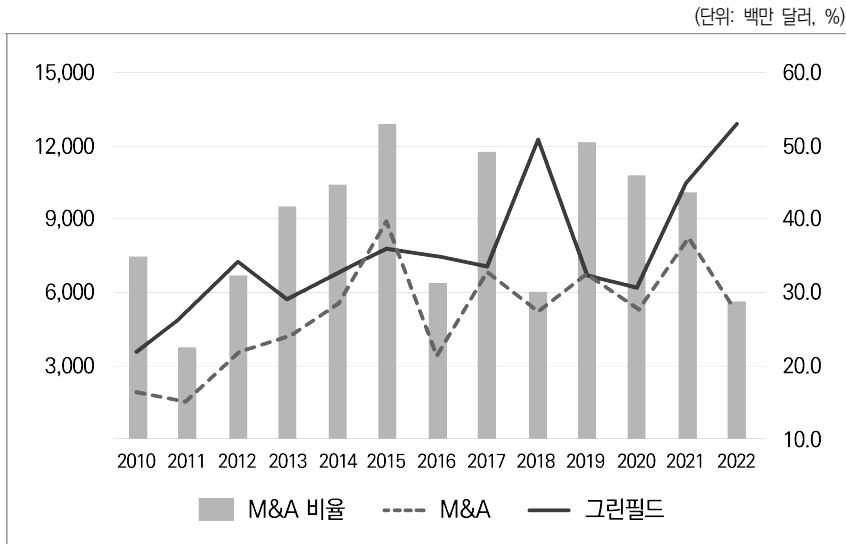
자료: Eic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3. 6. 1) 및 fDi Marke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3. 6. 7)를 이용하여 저자 정리.

4. 형태별 추이

[그림 2-3]에서와 같이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2015년까지 인수합병(M&A)형 및 사업장설립(Greenfield)형 모두에서 증가추이를 가진다. 다만 M&A형 투자는 2010년 19억 달러에서 2015년 89억 달러로, 그린필드형 투자(2010년 35억 달러, 2015년 78억 달러)보다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후 M&A형 투자는 60억 달러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그린필드형 투자

는 2018년, 2021년, 2022년 등 특정 시점에 급증하는 양상을 보인다. 전체 투자에서 M&A형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53.2%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 2019년 50.6%에서 2022년 28.7%로 꾸준히 하락하였다.

그림 2-3. 형태별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주: 1) M&A 비율은 전체 투자에서 M&A형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2) 금액은 왼쪽, 비율은 오른쪽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3. 5. 25).

한편 M&A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Eicon의 자료를 이용하여 우회투자의 가능성을 [표 2-6]과 같이 확인해보았다.¹⁵⁾ 즉 인수기업이 위치한 국가로부터의 투자보다 인수기업의 모기업이 위치한 국가로부터의 투자가 더 많은 경우 인수기업의 모기업이 인수기업을 이용하여 한국에 우회투자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¹⁶⁾

15) Eicon 자료 중 국경간 M&A로 퍼인수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한 거래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부록 그림 2]와 같이 Eicon의 M&A형 투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M&A형 투자와 유사한 추이와 규모를 가지나 일치하지는 않는다.

16) 중국에 위치한 A사(인수기업의 모기업)가 홍콩 내 자회사인 B사(인수기업)를 통해 한국의 C사(퍼인수기업)를 인수한 경우 실질적으로 중국이 한국에 투자한 것이나 투자통계에서는 홍콩이 투자한 것으로 집계된다.

[표 2-6]에 의하면 우회투자를 가장 많이 실시한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미국이며, 홍콩, 싱가포르, 중국 등 중화지역으로 구분된 국가 역시 우회투자를 많이 실시한 것으로 추측되었다. 그리고 상기 국가는 한국에 위치한 기업을 우회투자에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 네덜란드, 케이만군도, 몰타 등 조세 회피지역에 위치한 기업을 다수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우회투자 예상 실시 및 이용 대상국 비교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인수기업이 위치한 국가 기준(A)		인수기업의 모기업이 위치한 국가 기준(B)		차이(B-A)	
		2010~22년	2018~22년	2010~22년	2018~22년	2010~22년	2018~22년
우회투자에 이용된 국가	한국	1,133	1,778	0	0	-1,133	-1,778
	네덜란드	161	167	81	7	-79	-160
	케이만군도	101	262	45	114	-56	-148
	몰타	113	127	55	25	-58	-102
	오스트리아	35	91	0	0	-35	-90
우회투자를 실시한 국가	태국	0	0	62	160	62	160
	중국	219	229	346	402	127	173
	일본	143	106	388	348	245	242
	싱가포르	319	575	442	899	123	324
	홍콩	234	141	485	473	251	332
	미국	743	1,024	1,251	2,064	508	1,040

주: 1) Eicon에서는 인수기업의 모기업이 위치한 국가와 피인수기업이 위치한 국가가 다른 경우를 국경간 M&A로 정의함.

2) 차이가 양수(+)인 경우 우회투자를 실시한 국가를, 음수(-)인 경우 우회투자에 이용된 국가를 의미함.

3) 기간 평균 투자금액을 이용함.

자료: Eic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3. 6. 1)를 이용하여 저자 정리.

최근 한국에 위치한 기업을 이용한 우회투자로는 2021년 미국의 투자기업 인 KKR & Co Inc(인수기업의 모기업)가 한국 내 자회사인 Strada Holdco LP.(인수기업)를 통해 SK E&S(피인수기업)가 유상증자로 발생한 상환전환우선주를 20억 달러에 매입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¹⁷⁾

17) Eic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3. 6. 1) 및 김현정(2021. 10. 23), 「한신평 SK E&S, 상환전환우선주 발생으로 재무지표 개선 전망」,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6. 13) 참고.

대부분 주요국의 경우 국내외 기업에 대해 동일지원을 원칙으로 국적에 상관없이 프로젝트별로 투자 인센티브를 차등지원하며, 대부분 협상력으로 공여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공개된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국의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미국

미국의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는 2022년 8월에 미국정부가 도입한 2개 입법과 관련이 있는데,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이다. 이는 미국정부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전략산업 분야에서 완결형 생태계를 구축하여 미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가.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반도체 및 과학법’은 반도체 분야 및 주요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미국 연방정부의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동 법에 따라 미국정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총 2,481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반도체 등 핵심 전략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게 된다.

표 3-1. 미국 'CHIPS and Science Act' 인센티브 내용

명칭	펀드 및 지원 프로그램 주요 내용	금액 (1억 달러)
CHIPS Act of 2022 (2022년 반도체 법)에 따른 지원	CHIPS for America Fund(상무부 소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촉진 인센티브, 배정 금액 중 20억 달러까지 대출 및 대출 보증 비용으로 사용 가능)	390
	CHIPS for America Defense Fund(국방부 소관, 군수 및 정 보용 반도체 생산시설 지원)	20
	CHIPS for America International Technology Security and Innovation Fund(국무부 소관, 정보통신기술 안보 및 반도체 공급 망 관련 국제협력 지원)	5
	CHIPS for America Workforce and Education Fund(미국 국립과학재단 소관, 반도체 인력 양성 지원)	2
	Department of Commerce Research and Development(상무성 산하 반도체 및 전자공학 관련 연구개발(국립반도체기술센터 설립과 첨단 패키징 제조 등 프로그램에 지원)	110
	Public Wireless Supply Chain Innovation Fund(상무성 산 하 정보통신청, 국립표준기술원 및 국토안보부 등에 대한 공공 무선통신망 기술혁신 지원)	15
2022년 반도체 법에 따른 펀드 및 연구개발 지원 소계		542
Investment Tax Credit 투자세액공제	Advanced manufacturing investment credit('Facilitating American Built Semiconductors Act'에 의거, 반도체 제조시설 및 장비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금액의 25%를 세액공제)	240
Research & innovation 연구 및 혁신	미국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전반에 대한 지원 강화; 국립과학재단 (NSF), 상무성 소관 미국 전역에 걸친 20개 권역별 기술 허브 구축, 국립표준기술원(NIST), 미국 항공우주국(NASA), 에너지부 의 각종 연구개발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	1,699
CHIPS & Science Act of 2022에 따른 총 책정액		2,481

자료: Congress.gov, "CHIPS and Science Act of 2022," Public law No. 117-16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3.
7. 16).

‘반도체 및 과학법’에 따른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및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는 다시 ① ‘2022년 반도체 법(CHIPS Act of 2022)’에

따른 지원 ② 투자세액공제(Investment Tax Credit) ③ 과학기술 연구 및 혁신에 대한 지원(Research & innovation)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2022년 반도체 법’에 따른 지원의 경우 총 542억 달러 규모로 5개의 펀드 및 1개의 연구개발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5개의 펀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39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반도체 펀드(CHIPS for America Fund)’가 있는데, 이는 미국 상무부 소관으로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한다. 총 배정금액인 390억 달러 중에서 20억 달러까지는 생산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 또는 보증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국방부 소관의 ② ‘미국 국방 반도체 펀드(CHIPS for America Defense Fund)’가 있는데 군수 및 정보용 반도체 생산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20억 달러 규모이다. 규모 면에서 세 번째 펀드는 ③ ‘공공 무선 공급망 혁신 펀드(Public Wireless Supply Chain Innovation Fund)’로 15억 달러 규모이며, 상무성 산하 정보통신청 및 국립표준기술원 그리고 국토안보부와 관련해서 공공 무선통신망 분야의 기술혁신을 지원한다. 국무부 소관의 ④ ‘미국 반도체 국제 기술 안보 및 혁신 펀드(CHIPS for America International Technology Security and Innovation Fund)’의 경우 5억 달러 규모로 정보통신기술의 안보 및 반도체 공급망 관련 국제협력을 지원한다.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 소관의 ⑤ ‘미국 반도체 인력 및 교육 펀드(CHIPS for America Workforce and Education Fund)’는 2억 달러 규모로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한편 연구개발 지원 사업으로 110억 달러 규모의 상무성 주관 ‘반도체 및 전자공학 관련 연구개발(Department of Commerce Research and Development)’ 지원 사업도 ‘2022년 반도체 법’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국립반도체기술센터 설립과 첨단 패키징 제조 등 미국 상무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산업 관련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지원한다.

‘반도체 및 과학법’에 따른 지원의 둘째 카테고리는 투자세액공제이다. 이

는 별도의 법안인 ‘미국 생산 반도체 촉진법(Facilitating American Built Semiconductors Act)’에 의거해서 집행된다. 투자세액공제의 정식 명칭은 ‘첨단 제조 투자세액공제(Advanced manufacturing investment credit)’로 최첨단 반도체 제조시설 및 장비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금액의 25%를 세액공제 해준다. 동 세액공제에 따른 세수 감소분, 즉 지원금액 총액은 약 24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반도체 및 과학법’에 따른 셋째 지원 카테고리는 1,699억 달러 규모의 ‘과학기술 연구 및 혁신에 대한 지원’으로, 이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관련 미국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목적의 연구개발 자금지원이다.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의 관련 연구비, 상무성 소관 미국 전역에 걸친 20개 권역별 기술 허브 구축, 국립표준기술원(NIST), 미국 항공우주국(NASA) 및 에너지부 등의 각종 연구개발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을 담고 있다.

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2022년 8월 16일 발효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에 따른 미국 국민의 생활 어려움을 덜어주고, 청정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이에 따른 소득증가 등을 통해서 미국경제의 재건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조세 분야 개혁 및 의료보험 처방약 가격 개혁 등을 통해서 총 7,370억 달러의 재원을 확보하고, 이 중 4,370억 달러를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투자 및 건강보험개혁법인의 연장 적용 등에 투입하며, 나머지 3,000억 달러는 재정적자 감축에 사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¹⁸⁾

18) 허난이, 박수령, 문희은(2022).

표 3-2. IRA 청정자동차 세액공제 수혜 조건

① 배터리의 미국산 비율 충족 요건	
핵심 광물 비율 요건 (최대 3,750 달러 세액공제)	· 전기자동차에 탑재된 배터리 제조에 사용된 핵심 광물이 적용 비율(applicable percentage) 이상으로 i) 미국에서 추출 및 처리된 경우, 또는 ii) 미국의 FTA 체결국가에서 추출 또는 처리된 경우, 또는 iii) 북미에서 재활용된 경우 수혜 가능 · 기간별 적용 비율: (장관 지침 발행일 ~ '23. 12. 31) 40% → ('24) 50% → ('25) 60% → ('26) 70% → ('27. 1. 1 이후) 80%
북미산 배터리 부품 비율 요건 (최대 3,750 달러 세액공제)	· 전기자동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부품 중 미국 내 제조 또는 조립된 부품(셀, 모듈/팩, 셀/모듈/팩)이 적용 비율 이상인 경우 수혜 가능 · 기간별 적용 비율: (장관 지침 발행일 ~ '23. 12. 31) 50% → ('24) 60% → ('25) 60% → ('26) 70% → ('27) 80% → ('28) 90% → ('29. 1. 1 이후) 100%
② 북미지역 내 최종 조립 요건	
· 북미지역에서 최종 조립이 이루어지는 전기자동차에만 세금공제가 제공되며, 해당 최종 조립 요건은 2022년 8월 16일 이후부터 적용	
※ 청정자동차 세금공제 제외 대상	
· 우려 외국기업(Foreign Entity of Concern)*에 의해 추출, 가공, 재활용된 핵심 광물을 통해 제조된 배터리 사용 전기차 · 우려 외국기업에 의해 제조 및 조립된 배터리 부품 사용 전기차 * 우려 외국기업은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section 40207(a)(5)에서 정의	

자료: 허난이, 박수령, 문희은(2022),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주요 내용과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내용 중 특히 에너지 안보 분야 투자의 경우 청정에너지의 생산 및 활용과 관련된 투자세액공제 및 전기차 보조금 등을 통해 청정에너지 및 전기차 관련 산업에서 미국기업의 리쇼어링 및 외국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태양광 패널, 풍력, 배터리 등 청정에너지 산업에서 관련 부품 생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상품 단위당 세액공제를 명시하고 있어서 외국기업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갖추도록 유인하고 있다.

미국의 전략산업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전기자동차 구매에 대한 최대 7,500달러의 세금공제 형태의 전기차 보조금 혜택에서 찾을 수 있다.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하나는 해당 전기차가 북미지역 내에서 최종 조립되어야 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전기차 배터리의 미국산 비율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산 배터리 비율과 관련해서는 다시 ‘핵심 광물 비율’ 요건과 ‘배터리 부품 비율’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각각 3,750달러의 보조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먼저 ‘핵심 광물 비율’ 요건의 경우 전기자동차에 탑재된 배터리 제조에 사용된 핵심 광물이 ① 미국에서 추출 및 처리된 경우, 또는 ② 미국의 FTA 체결국가에서 추출 또는 처리된 경우, 또는 ③ 북미에서 재활용된 경우이며, 충족해야 할 적용 비율은 기간별로 달리 설정되어 있는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40%이며, 2024년 50%, 2025년 60%, 2026년 70%, 2027년 이후 80%로 책정되어 있다.

배터리와 관련된 두 번째 요건인 ‘배터리 부품 비율’의 경우 전기자동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부품인 셀, 모듈/팩, 셀/모듈/팩 등이 미국 내 제조 또는 조립되어야 비율 계산에서 포함될 수 있다. ‘배터리 부품 비율’의 기간별 적용 비율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50%이며, 2024~25년 60%, 2026년 70%, 2027년 80%, 2028년 90%, 2029년 이후 100%로 설정되어 있다. 미국정부는 2030년까지 신규 판매되는 자동차의 50%를 전기차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갖고 전기차의 생산과 관련한 미국 내 완결형 공급망 구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2023년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세부지침이 발표되면서 혜택 대상 차량 목록이 발표되었는데,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받은 차종이 IRA 세부지침이 적용되지 않았던 2022년에는 41개 모델이었는데, 엄격한 세부지침이 적용된 2023년에는 16개 모델, 22개 트림¹⁹⁾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박낙희 2023). 특히 수혜모델은 모두 미국 자동차 브랜드로 알려졌다. 현대차 및 기아

19) 트림 기준으로 총 22개 차종 중에서 배터리 미국산 비율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7,500달러 보조금을 받는 차종은 14개이며, 나머지 8개 차종의 경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여 3,750달러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박낙희(2023. 4. 18), 「전기차 7500불 크레딧 모두 미국차」,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7. 30)).

차 등을 포함, 미국 내 자동차 생산공장을 보유한 모든 외국 자동차 브랜드가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외국계 자동차 회사들의 전기차와 배터리 공급망 관련 미국 내 투자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 EU

EU의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는 최근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제시한 두 가지 정책과 관련이 있다. 하나는 2020년 발표된 ‘유럽신산업전략(A New Industrial Strategy for Europe)’에 따른 ‘InvestEU 프로그램(InvestEU Programme)’이며, 다른 하나는 2022년 제안된 ‘유럽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에 따른 반도체 공장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이다.

가. 유럽신산업전략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20년에 유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럽신산업전략(A New Industrial Strategy for Europe)’을 발표하였다.

동 전략의 핵심 내용은 유럽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전환(twin transition), 즉 기후 중립(climate neutrality) 전환 촉진과 디지털 리더십 확보를 위한 전환의 촉진이다.

유럽신산업전략은 2030년까지 유럽 산업의 기후 중립화와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 추진 사항을 일곱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산업활동에 대한 확실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유럽 차원의 단일 시장을 디지털 측면에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단일 시장 이행 행동 계획’, ‘지속가능한 디지털 유럽을 위한 중소기업 전략’, ‘지식재산 행동 계획’, ‘디지털

털 서비스법’ 등을 주요 추진 전략 및 행동 계획으로 제시하고 있다. 둘째, 글로벌 공정경쟁 강화를 통한 유럽 산업의 경쟁력 유지이다. 이와 관련해서 ‘외국 정부의 보조금 대응에 대한 백서’, ‘산업보조금에 대한 글로벌 규범 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기후 중립성 촉진을 위한 산업 지원이다. ‘EU 에너지 시스템 통합 전략’, ‘탄소집약형 산업 및 지역 지원 이행 기반’, ‘EU 클린 철강 전략’, ‘지속가능 화학 전략’, ‘EU 해상 신재생 에너지 전략’, ‘지속가능 스마트 모빌리티 전략’, ‘기존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 전략’,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등의 세부 추진 전략이 제시되었다.

표 3-3. EU 신산업전략의 핵심 분야별 추진 전략

산업 전환 핵심 분야	주요 추진 전략 및 행동 계획
1. 산업 확실성 제고: 디지털 단일 시장 확대 (Creating certainty for industry: A deeper and more digital single market)	- 단일 시장 이행 행동 계획(Single Market Enforcement Action Plan) - 지속가능한 디지털 유럽을 위한 중소기업 전략(SME strategy for a sustainable and digital Europe) - 지식재산 행동 계획(Intellectual Property Action Plan) -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2. 글로벌 공정경쟁 강화 (Upholding a global level playing field)	- 외국 정부의 보조금 대응에 대한 백서(White paper on an instrument on foreign subsidies) - 산업보조금에 대한 글로벌 규범 강화(Strengthening the global rules on industrial subsidies)
3. 기후 중립성 촉진 산업 지원 (Supporting industry towards climate neutrality)	- EU 에너지 시스템 통합 전략(EU Strategy for Energy System Integration) - 탄소집약형 산업 및 지역 지원 이행 기반(Just Transition Platform) - EU 클린 철강 전략(EU Strategy on Clean Strategy) - 지속가능 화학 전략(Chemicals Strategy for Sustainability) - EU 해상 신재생 에너지 전략(EU Strategy on Offshore Renewable Energy) - 지속가능 스마트 모빌리티 전략(Sustainable and Smart Mobility Strategy) - 기존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 전략(Renovation Wave) -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표 3-3. 계속

산업 전환 핵심 분야	주요 추진 전략 및 행동 계획
4. 강력한 순환 경제 구축 (Building a more circular economy)	- 새로운 순환 경제 행동 계획(New Circular Economy Action Plan) - 새로운 지속가능 배터리 규제 프레임(New Regulatory Framework for Sustainable Batteries)
5. 산업혁신 정신 정착 (Embedding a spirit of industrial innovation)	- 유럽 혁신 협의회 출범(European Innovation Council) - 현장 중심 혁신 및 시도(Place-based innovation and Experimentation) - 디지털 혁신 허브(Digital Innovation Hub)
6. 스킬 교육 및 스킬 재교육 (Skilling and reskilling)	- 디지털 교육 행동 계획(Digital Education Action Plan 2021~27)
7. 산업 전환을 위한 투자 및 자원 조달 (Investing and financing the transition)	- EU 중장기 재정 운영 계획(EU's 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for 2021~27) - InvestEU 프로그램 및 유럽 그린딜 투자 계획(InvestEU and the 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0), "A New Industrial Strategy for Europe," COM(2020), p. 102의 내용을 저자가 요약.

넷째, 강력한 순환 경제 구축으로, '새로운 순환 경제 행동 계획', '새로운 지속가능 배터리 규제 프레임'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다섯째, 산업혁신 정신의 정착으로, '유럽 혁신 협의회 출범', '현장 중심 혁신 및 시도', '디지털 혁신 허브' 등을 통해 추진한다. 여섯째, 스킬 교육 및 스킬 재교육으로 '디지털 교육 행동 계획'을 통해 이를 추진한다.

한편 마지막 일곱째는 산업 전환을 위한 투자 및 자원 조달에 관한 것인데, '유럽신산업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공공 자원 조달 및 민간 투자 유도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EU 및 회원국의 공공 재원을 효과적으로 투입하고, 이를 활용해서 더 많은 민간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유럽신산업 전략'이 목표하는 바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서 '2021~27년 EU 중장기 재정 운영 계획(EU's 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for 2021~27)'에 따른 'InvestEU 프로그램 및 유럽 그린딜 투자 계획(InvestEU and the 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을 제시하고 있다.

나. InvestEU 프로그램

‘InvestEU 프로그램(InvestEU Programme)’은 ‘유럽신산업전략’ 등에서 제시된 유럽연합의 핵심 정책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동 프로그램은 2020년까지 운영된 ‘유럽 전략 투자 펀드(EFSI: European Fund for Strategic Investments)’의 성공적인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도입된 것으로, 2021년부터 2027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럽의 산업혁신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투자지원 프로그램이다.

‘InvestEU 프로그램’은 ‘InvestEU 펀드(InvestEU Fund)’, ‘InvestEU 자문 허브(InvestEU Advisory Hub)’, ‘InvestEU 포털(InvestEU Portal)’ 등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InvestEU 펀드’의 경우 ‘InvestEU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투자재원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것으로, 2021년부터 2027년까지 EU 예산 262억 유로를 투입해서 총 3,720억 유로의 추가 투자를 끌어낸다는 계획을

표 3-4. InvestEU Fund의 주요 내용

펀드 배분 세부 분야	배분액(비율)	내용
지속가능 인프라	99억 유로 (37.8%)	지속가능한 에너지, 디지털 연계, 운송, 순환 경제, 수자원, 폐기물, 기타 환경 인프라 등
연구, 혁신, 디지털화	66억 유로 (25.1%)	연구/혁신 프로젝트, 연구 결과 상용화, 산업 디지털화, 혁신기업 스케일업, 인공지능 등
중소기업	69억 유로 (26.4%)	중소기업의 금융접근 촉진, 코로나19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등
사회적 투자 및 기술	28억 유로 (10.6%)	기술, 교육, 훈련, 사회적 주택, 학교, 대학, 병원, 의료, 장요양, 소액 금융, 사회적 기업, 이민자 통합, 난민, 취약계층 등

자료: 주벨기에대사관(2021), 『Invest EU 프로그램 주요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가 정리.

담고 있다. ‘InvestEU 펀드’는 투자보증 형태의 지원이다. 즉 유럽 기업 등이 추진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민간 금융기관 등이 자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EU 예산을 투입하여 투자보증을 제공함으로써 투자 리스크를 낮추어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InvestEU 펀드’에 투입되는 262억 유로는 네 가지 정책 분야로 나누어 배정되었다. 첫째, 지속가능 인프라 분야에 총 재원의 37.8%에 해당하는 99억 유로가 배정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디지털 연계, 운송, 순환 경제, 수자원, 폐기물, 기타 환경 인프라 등에 재원이 할당된다. 둘째, 연구, 혁신, 디지털화 분야로 총 재원의 25.1%에 해당하는 66억 유로가 배정되었는데, 연구/혁신 프로젝트, 연구 결과 상용화, 산업 디지털화, 혁신기업 스케일업(scale-up), 인공지능 등의 투자 프로젝트에 투입된다. 셋째, 중소기업 정책 분야로 69억 유로(총 재원의 26.4%)가 배정되었고 주로 중소기업의 금융접근 촉진, 코로나19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등에 투입된다. 넷째, 사회적 투자 및 기술 정책 분야로 28억 유로(총 재원의 10.6%)가 투입되어 기술, 교육, 훈련, 사회적 주택, 학교, 대학, 병원, 의료, 장기요양, 소액 금융, 사회적 기업, 이민자 통합, 난민, 취약계층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투자 프로젝트에 지원된다.

‘InvestEU 자문 허브’는 유럽투자은행(EIB: European Investment Bank)이 주관하는 것으로 ‘InvestEU 펀드’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를 추진하는 프로젝트 주체 및 자금제공 주요 금융기관 등에 해당 투자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준비, 투자 구조 설계 및 실행 등과 관련한 자문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InvestEU 포털’은 유럽 투자기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용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InvestEU 프로그램’을 활용한 투자관계자들을 연결해주는 마켓 플레이스 플랫폼이다. 2023년 7월 30일 기준 ‘InvestEU 포털’에는 1,182개 투자 프로젝트가 게시되어 있다.

다. 유럽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응하고, 유럽의 반도체 분야 기술력 강화를 위해서 2022년 2월 유럽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을 제안했다.²⁰⁾ 이 제안 이후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은 1년 넘게 협의를 거쳐 2023년 4월 18일에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반도체법을 구체화할 EU 규정과 회원국에 대한 권고를 공식적으로 제시했다.²¹⁾ 유럽반도체법의 목적은 EU 내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함으로써 반도체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반도체 공급망의 회복탄력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반도체법에 따라 EU 공공 및 민간 자금을 모두 합쳐 430억 유로(약 57조 7,750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현재 10%에 불과한 EU의 글로벌 반도체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20%로 두 배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유럽반도체법은 ‘반도체 유럽 이니셔티브(Chips for Europe Initiative)’, ‘반도체 공급 안전 보장을 위한 새로운 체계(A new framework to ensure security of supply)’ 및 ‘회원국에 대한 제언(Recommendation to Member States)’ 등 세 가지 축(Three Pillars)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5. 유럽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의 주요 내용

세 가지 축(Pillars)	주요 내용
반도체 유럽 이니셔티브 (Chips for Europe Initiative)	110억 유로 규모의 소위 ‘반도체 협력 사업(Chips Joint Undertaking)’ 재원을 투입, 유럽의 반도체 분야 중장기 기술 리더십 확보를 위한 기술력 및 혁신역량 강화 - 반도체 연구 분야에서 유럽의 선도적 입지 강화 - 반도체 설계 도구, 시제품 및 시험역량 강화 - 에너지 효율적이며 신뢰성 있는 반도체 인증절차 구축 - 마이크로 전자공학 인재, 스킬 및 교육 강화 - 반도체 시스템의 혁신적 디자인 및 활용을 촉진할 역량센터 네트워크의 구축

20) European Commission(2022a).

21) European Commission(2023).

표 3-5. 계속

세 가지 축(Pillars)	주요 내용
반도체 공급 안전 보장을 위한 새로운 체계 (A new framework to ensure security of supply)	다음 두 가지 형태의 혁신적인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 유치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허용 ① 오픈 EU 파운드리(Open EU Foundries): 다른 산업체 생산에 상당한 물량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반도체 공장 ② 반도체 통합 생산시설(Integrated Production Facilities): 기업 자신의 시장을 위한 반도체 설계 및 생산 통합시설 한편 20억 유로 규모의 '반도체 펀드(Chip Fund)'를 조성, 창업기업 및 중소·중견 기업의 혁신을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투자유치를 촉진함.
회원국에 대한 제언 (Recommendation to Member States)	지속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 위기 측면에서 회원국과 EU 집행위원회 사이의 즉각적인 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제언: 현재 및 미래의 반도체 공급망 교란 상황에 유럽이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동시에 반도체 공급망 손상을 완화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자료: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Chips Ac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3. 7. 1)의 내용을 저자가 요약.

첫째, '반도체 유럽 이니셔티브'는 유럽의 반도체 분야 중장기 기술 리더십 확보를 위해 기술력 및 혁신역량을 강화하려는 EU 차원의 연구개발 지원이다. 110억 유로 규모의 '반도체 협력 사업(Chips Joint Undertaking)'을 통해서 ① 반도체 연구 분야에서 유럽의 선도적 입지 강화 ② 반도체 설계 도구, 시제품 및 시험역량 강화 ③ 에너지 효율적이며 신뢰성 있는 반도체 인증절차 구축 ④ 마이크로 전자공학 인재, 스킬 및 교육 강화 ⑤ 반도체 시스템의 혁신적 디자인 및 활용을 촉진할 역량센터 네트워크의 구축 등의 분야에 재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반도체 공급 안전 보장을 위한 새로운 체계'의 경우 반도체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혁신적인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허용하기로 했다. EU 회원국은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 시 EU 차원의 엄격한 규제(EU State aid rules)를 받는데, 전략적으로 중요한 반도체 공장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겠다는 것

이다. 대상이 되는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은 ‘오픈 EU 파운드리(Open EU Foundries)’와 ‘반도체 통합 생산시설(Integrated Production Facilities)’이다. ‘오픈 EU 파운드리’는 다른 산업체 생산에 상당한 물량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반도체 공장을 말하며, ‘반도체 통합 생산시설’은 해당 반도체 기업이 자신의 시장을 위해서 반도체의 설계 및 생산을 통합한 시설이다. EU 집행위원회는 반도체법 협의안을 근거로 ‘STMicroelectronics’가 시실리 카타니아(Catania)에 7억 3,000만 유로를 투자해서 건설하는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공장에 대한 이탈리아 정부의 2억 9,250만 유로의 보조금 지원안을 2022년 10월에 승인했다.²²⁾ 반도체 분야 대규모 투자에 대한 투자보조금 형태의 인센티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 이외에 20억 유로 규모의 ‘반도체 펀드(Chip Fund)’를 조성, 창업기업 및 중소·중견 기업의 혁신을 스케일업(scale-up)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이 기업들이 벤처캐피털 등 지분 투자유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셋째, ‘회원국에 대한 제언’의 경우 지속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 위기 측면에서 회원국과 EU 집행위원회 사이의 즉각적인 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및 미래의 반도체 공급망 교란 상황에 유럽의 회복탄력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반도체 공급망 손상을 완화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 일본

일본의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와 관련된 최근 정책 변화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일본정부가 2021년에 발표한 ‘대일직접투자촉진전략’에 포함된 ‘전략산업 투자유치 시책’이며, 다른 하나는 일본의 칩

22) European Commission(2022b).

단산업 육성을 위해서 도입된 반도체 기금 및 그린이노베이션 기금 등의 확충이다. 전자의 경우 투자 인센티브 자체를 다루고 있지만, 후자의 확충된 기금을 첨단 전략산업 외국인투자 유치에 활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 대일직접투자 촉진 전략

일본은 2021년 6월 내각부 주도로 ‘대일직접투자촉진전략(對日直接投資促進戰略)’이라는 제하의 범부처 차원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전략을 제시하였다.²³⁾ 동 전략은 일본이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 디지털 및 녹색과 같은 신성장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와 글로벌 인재를 유치, 일본 국내에서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강력한 혁신을 창출하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에 따른 것이다.

‘대일직접투자촉진전략’은 ① 디지털·그린 신시장 창조와 이노베이션·에코시스템 구축, ②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한 비즈니스 환경 정비, ③ 지역강점 활용 민관협력으로 투자유치 확대와 지방 활성화 등 세 가지 세부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 가지 시책 중에서 첫 번째 세부 전략인 ‘디지털·그린 신시장 창조와 이노베이션·에코시스템 구축’의 내용이 전략산업 외국인투자 인센티브와 관련된다.

일본의 전략산업 투자유치 시책이라고 볼 수 있는 ‘디지털·그린 신시장 창조와 이노베이션·에코시스템 구축’ 시책 전략의 내용은 일본이 국가 전략으로서 2050년 탄소중립사회의 실현, 디지털 정부 구축과 민간 비즈니스의 디지털 전환 촉진 등 디지털화를 강력히 추진하는 가운데, 디지털 및 그린 산업 등 전략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외국의 연구개발 및 제조거점 직접투자를 유치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동시에 새로운 성장시장을 창출해 미래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또한 그린 및 디지털 분야 핵심 전

23) 内閣部 對日直接投資推進會議(2021).

락산업에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내 핵심 클러스터의 조성도 포함되어 있다.

표 3-6. 일본의 전략산업 투자유치 주요 시책

시책 명칭	주요 내용
국제적인 혁신·에코시스템 거점 도시의 형성	지역 톱 대학을 축으로 국제 혁신·에코시스템 도시를 형성해, 외국 스타트업, 해외 인재(교원·연구자, 기업가 등)나 투자자의 집적을 통합적으로 촉진(2025년까지 8개 도시 목표)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그린 신시장 창출 (2050년 카본 중립 실현)	전력의 그린화(차세대 축전지 기술 등), 수소 사회의 실현(열·전력 분야 등을 탈탄소화하기 위한 수소 대량 공급·이용 기술 등), CO ₂ 재활용(CO ₂ 를 소재의 원료나 연료 등으로 활용하는 탄소 재활용 등) 등 중점 분야에 대해 2조 엔의 기금(그린이노베이션 기금)으로 지원 - 동 기금 사용과 관련, 일본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경우, 외국기업과의 연계나 해외 첨단기술 도입, 국제 공동연구 및 실증 등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
디지털 분야 투자 환경 정비 (경제안전 보장 관점도 고려)	공급망 안정화 및 경제안보 보장 등의 관점에서 Post-5G 및 반도체 기술 혁신 기금(일본 반도체 기금),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투자 촉진 세제 등을 통해서 외국기업에 의한 실증이나 시장화 조사, 제조 설비에의 신규 투자 등을 지원

자료: 内閣部 對日直接投資推進會議(2021), 『對日直接投資促進戰略』 내용을 저자가 정리.

‘디지털·그린 신시장 창조와 이노베이션·에코시스템 구축’ 전략의 추진을 위해서 일본정부는 기존 일본기업들의 관련 투자 및 연구개발을 지원하고자 마련하고 있던 기금 등 인센티브를 외국인투자 유치에 활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데, 그 내용은 ‘5G 촉진법’을 개정하고 ‘그린이노베이션 기금’에 대한 적용을 외자계 기업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 두 가지 인센티브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나. 5G 촉진법과 반도체 기금

일본정부는 2020년 6월 소위 '5G 촉진법'을 제정하여 차세대 5G 통신설비와 드론 등 첨단 IT 분야에 대한 설비투자의 확충을 위한 세액공제(투자금액의 최대 15%) 및 30%의 특별감가상각 혜택을 도입했다.²⁴⁾ 또한 1,100억 엔 규모의 5G 정보시스템 관련 연구개발 기금을 조성했는데, 동 기금은 '포스트 5G 통신 기반강화 연구개발-첨단 반도체의 후공정 기술 개발-고성능 컴퓨터용 패키지 기술 개발 사업' 전용 기금이다.²⁵⁾ 이 연구개발 관련 전용 기금이 비록 반도체 분야의 연구개발 자금지원이긴 하지만 그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고, 또한 세제지원의 경우 주로 5G 사업자 등의 통신장비 도입에 대한 세액공제 및 특별상각에 한정된다. 이에 일본정부는 반도체 분야 국내외 기업의 일본 내 투자를 확충할 수 없다고 보고, 2021년 12월에 '5G 촉진법'을 개정하여 반도체 분야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였다. 이 '5G 촉진법' 개정으로 반도체 부분의 생산시설 정비 및 장비 교체 등에 소요되는 투자자금에 대해서 일본정부는 두 가지 기금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첫째, 6,170억 엔 규모인 '첨단 반도체의 국내 생산기반 정비 기금'으로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 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에 설치된 보조금이다. 일본 내 반도체 생산 계획이 '5G 촉진법'에 따라 승인될 경우 승인 사업에 대해서는 소요자금의 50%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다.²⁶⁾ 2022년 6월에 일본 경제산업성은 대만 TSMC의 일본 구마모토 공장에 대한 설비투자 계획을 승인하고 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지원금액은 최대 4,760억 엔(약 4조 5,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²⁷⁾ 투자금액이 약 1조 1,000억 엔으로 알려졌다다는 점에서 보조금은 투자금액의 43.3%에 이른다.

24) 일본 경제산업성, 「5G도입촉진세제」,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3. 7. 23).

25) 김규판(2022).

26) 위의 자료.

27) 김태영(2022. 6. 18), 「日, TSMC 구마모토 반도체 공장 승인…최대 4조5000억원 지원」,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3. 6. 13).

표 3-7. 일본 반도체 기금 현황

세부 유형	금액 (억 엔)	근거
5G 정보시스템 관련 R&D 지원 기금	1,100	5G 촉진법 '20년 6월 제정
첨단 반도체의 국내 생산기반 정비 기금	6,170	개정 5G 촉진법
일본 국내 반도체 공장설비 교체·증설 기금	470	'22년 3월 시행

자료: 김규판(2022).

둘째, 470억 엔 규모의 ‘일본 국내 반도체 공장설비 교체·증설 기금’으로, 이 보조금의 경우 지원 한도는 투자금액의 1/3에 최대 150억 엔이다. 일본 국내에 반도체 공장을 갖고 있는 키옥시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이 이 보조금 지원 유력 후보로 거론되었다.²⁸⁾

일본정부는 2022년 7월 키옥시아에 대해서 929억 엔(전체 투자금액 2,788억 엔의 1/3)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동 지원은 앞서 언급한 ‘일본 국내 반도체 공장설비 교체·증설 기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지만²⁹⁾ 실제 지원금액이 기금 책정금액보다 더 크다는 점에서 동 기금을 증액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한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2023년 5월에 2,000억 엔의 보조금을 받고 히로시마 공장에 ASML의 최첨단 노광장비를 설치해 DRAM 반도체를 생산한다고 알려졌으나³⁰⁾ 그 보조금 재원이 앞서 언급한 두 보조금 중에서 어떤 것인지 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본정부는 이들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엄격한 지원기준을 설정하고 있다.³¹⁾ 지원을 받는 기업은 일본정부가 정하는 반도체 생산시설 정비에 관한 지

28) 김규판(2022).

29) 이영희(2022. 7. 27), 「반도체에 사활 건 日, 키옥시아에 9천억원 지원…“1위 삼성에 대항”」,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6. 23).

30) 이현일(2023. 5. 18), 「美마이크론, 2조 보조금 받아 일본서 첨단 반도체 생산」,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6. 23).

31) 김규판(2022).

침을 준수해야 하고, 공장 가동 이후 일정 기간 이상 일본 국내에서 생산해야 하며, 공급망 불안으로 일본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증산해야 하며,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일본정부의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다. 그린이노베이션 기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정부는 2021년 6월에 ‘대일직접투자촉진전략’을 제시하면서 2021년 3월에 2조 엔 규모로 조성된 ‘그린이노베이션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린이노베이션 기금’은 일본정부가 2020년 12월에 발표한 그린성장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에 설치한 것이다.³²⁾

일본정부는 2조 엔의 기금을 마중물로 15조 엔에 이르는 민간의 연구개발 및 투자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일본정부는 동 기금 사용과 관련해서 일본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경우, 외국기업과의 연계나 해외 첨단기술 도입, 국제 공동연구 및 실증 등을 위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현재까지 외국계 기업의 프로젝트 참여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³³⁾

표 3-8. 일본 그린이노베이션 기금 사업

구분	내용
지원대상 분야	- 그린성장 전략상 실행계획을 책정한 중점 분야에서 야심적인 2030년 목표(성능, 비용, 생산성, 도입량, CO ₂ 감축량 등)에 도전하는 프로젝트
대상 사업자	- 상용화까지 계획하는 기업 등이 대상 - 중소·벤처기업, 대학·연구기관의 참여도 독려
사업기간	- 최장 10년 - 연구개발, 실증, 상용화까지 장기에 걸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프로젝트를 지원. - 단기간 지원으로 충분한 프로젝트는 대상에서 제외

32) 김규판(2022).

33) 위의 자료.

표 3-8. 계속

구분	내용
추진체계	- 경제산업성 → 사무국 기능, 기본방침 수립, 프로젝트 기획 등 - 분야별 워킹그룹 → 프로젝트 내용·규모 등 심의, 프로젝트 진척상황 체크 - NEDO(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 → 자금 관리·운용, 공모·심사·검사·지불 등 사무업무, 기술·사업에 대한 조언 등

자료: 김규판(2022), p. 9, 재인용.

4. 중국

시진핑 집권 3기가 출범한 2022년에 개최된 제20차 당대회 이후 중국정부가 처음으로 발표한 정책이 바로 ‘제조업 분야의 외자 유치 확대 정책’이다.³⁴⁾ 그만큼 중국정부는 최근 미국의 자유세계 중심의 공급망 구축 및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견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외국인투자 확대를 통해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기존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은 경제·산업 구조의 고도화에 주요 목적이 있었는데, 이번 정책은 경제 안보 차원에서 미국이 견제하는 첨단 제조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3-9. 중국의 제조업 중심 외자유치 확대 정책의 주요 내용

방향	주요 내용
투자환경 최적화를 통한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 외국인투자 개방 확대 - 지재권 보호, 표준 제정, 입찰 및 정부조달 등에서 내국민대우 - 의료, 반도체, 화학, 에너지 분야 투자유치 활동 강화
투자서비스 강화 및 기진출 외투기업 안정화	- 국제 비즈니스 인력 출입국 절차 간소화 - 원활한 국제물류 보장 - 외투기업에 대한 대출 등 금융지원 강화 - 외투기업 이익 재투자 세제지원: 배당이 재투자될 경우 원천징수 면제 - 제조업 외투기업에 대한 통관서비스 지원

34) 오종혁(2022).

표 3-9. 계속

방향	주요 내용
외국인투자 구조 개선	- 외국인투자 업종 고도화: 선진 제조 및 첨단장비, 기초 및 핵심 부품 등을 장려 - 외국기업의 R&D 센터 설립 장려 - 외국인투자를 저탄소 전환 분야로 유도 - 중국 중서부 및 동북 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 촉진

자료: 오종혁(2022)의 표를 저자가 일부 편집.

중국정부의 ‘제조업 분야의 외자유치 확대 정책’의 내용은 ① 투자환경 최적화를 통한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② 투자서비스 강화 및 기진출 외투기업 안정화 ③ 외국인투자 구조 개선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요약된다.³⁵⁾ 첫째, 투자환경 최적화를 통한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의 경우 외국인투자 개방업종을 확대하고,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내국민대우를 강화하여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기반으로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 보호, 표준 제정, 정부조달 및 입찰 등에서 내국민대우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점이다. 이러한 투자환경 개선을 기반으로 국제적인 다양한 투자유치 채널 및 기회를 활용, 의료, 반도체, 화학, 에너지 분야 등에서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둘째, 투자서비스 강화 및 기진출 외국인투자기업 안정화의 경우 외국인투자자 관계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즉 중국 투자를 결정했거나 이미 중국에 투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투자 및 입국단계 그리고 현지 기업 운영 과정에서 중국정부가 그 지원을 강화하여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중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외국인투자기업 임원 및 가족에 대한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투자기업 운영에 필요한 국제물류 및 통관 등 절차에서도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 내 대출 및 주식시장 상장 허용 등 금융 및 투자 지원을 강화하는

35) 오종혁(2022).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기진출 외투기업의 이익재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 해외로 지급되는 배당에 대해서 재투자를 조건으로 배당소득 원천징수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셋째, 외국인투자 구조 개선은 기본적으로 투자 인센티브와 연계되어 있는 장려목록을 첨단 제조업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현재 이 장려산업 목록에 해당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세 가지 특혜로 구성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① 법인세를 정상 세율인 25%가 아닌 특혜 세율인 15%를 적용한다. ② 토지사용료의 경우 중국 공업용지 최저기준의 70% 수준으로 경감해준다. 그리고 ③ 투자총액 범위 내에서 수입하는 설비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 장려목록에서 범용적 기술과 관련된 제조업종은 제외하고 첨단 제조 및 장비, 기초 및 핵심 부품 등의 분야를 추가하여 외국인투자의 업종 구조를 더욱 고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중국정부는 다국적기업이 중국 내 연구개발센터를 설치하도록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제시하고 있다.

표 3-10. 중국의 장려산업 목록 확대 및 투자 인센티브 내용

구분	외국인투자 장려산업 목록 확대의 주요 내용
선진 제조업	부품, 장비 제조와 같이 공급망 수준 제고를 위한 목록 신설(바이오 에너지 신기술 및 신제품, 의약품제조업, 첨단기술 금속재료 등) 및 공급망 수준 향상과 기술 업그레이드 관련 목록 추가
생산성 서비스업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융합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기술서비스 관련 다양한 분야를 목록에 추가(그린 분야 첨단 시스템 통합 기술 및 서비스, 전문 디자인, 인적자원관리 서비스 등)
중서부 지역	중서부 12개 성 지역을 자원 및 노동력의 비교우위를 종합하여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중점 육성 산업을 목록에 추가

장려산업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 ① 법인세를 정상 세율인 25%가 아닌 특혜 세율인 15%를 적용
- ② 토지사용료를 중국 공업용지 최저기준의 70% 수준으로 경감
- ③ 투자총액 범위 내에서 수입하는 설비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

자료: 한국은행(2022)의 내용 및 코트라(2022. 11. 8), 「중국 新 외국인투자장려산업목록, 2023년 1월 1일부 시행」, 해외시장뉴스를 저자가 정리.

중국정부는 ‘제조업 분야의 외자유치 확대 정책’을 발표한 이후 곧바로 외국 기업 투자 장려산업 목록을 재정비한 ‘新 외국인투자장려산업목록’을 2022년 11월에 발표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동 목록 확대 개편 내용은 ① 선진 제조업 ② 생산성 서비스업 ③ 중서부 지역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³⁶⁾ 선진 제조업의 경우 부품, 장비 제조와 같이 공급망 수준 제고를 위한 목록이 신설되었고, 공급망 수준 향상과 기술 업그레이드 관련 분야도 목록에 추가되었다. 특히 컴퓨터, 통신설비 및 기타 전자설비 제조업을 담고 있는 전자기계 제조업의 항목을 7개 늘렸는데,³⁷⁾ 동박적층판(CCL) 전용 전자 유리섬유포, 핵심 소프트웨어, 웨이퍼, 스마트 실버용품, 유기 고분자 소재, 고순도 전자화합품, 신기능 유리 등을 전국 범위에서 목록에 포함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통해 중국 내 전자 및 반도체 분야 공급망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했다. 한편 생산성 서비스업의 경우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융합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기술서비스 관련 분야를 목록에 추가하여 그린 분야 첨단 시스템 통합 기술 및 서비스, 전문 디자인, 인적자원관리 서비스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낙후지역인 중서부 12개 성 지역을 자원 및 노동력의 비교우위를 종합하여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중점 산업을 목록에 추가하였다.

36) 한국은행(2022).

37) 코트라(2022).

1. 현행 투자 인센티브 주요 내용 및 한계점

우리나라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는 조세감면, 입지지원, 현금지원 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2019년 이전까지는 조세감면이 가장 핵심적인 지원이었고, 입지지원이나 현금지원은 보조적인 지원이었다.

조세감면은 원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업 재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지방세 감면, 그리고 자본재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 등으로 구성되었다. 조세감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법인세 감면의 경우, 국내 투자자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고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그 혜택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EU가 한국을 조세 관련 비협조국가로 지정하자, 우리 정부가 이에 대응하여 2019년부터 법인세 감면을 폐지했다. 법인세 감면이 폐지된 이후 남아 있는 나머지 조세감면은 그 혜택이 규모 면에서 크지 않은 재산세 및 관세 감면 등으로 제한되면서 조세감면의 투자유치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고 하겠다.

입지지원의 경우 외국인투자지역 제도를 중심으로 분양가 및 임대료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인투자지역은 기본적으로 공장입지와 관련된 지원이지만, 투자금액 등 지정 또는 단지 입주 요건과 연계하여 법인세 감면이 함께 제공되었다. 그런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폐지되면서 외국인투자지역 입지지원의 투자유치 효과도 크게 약화되었다.

표 4-1. 첨단전략산업 분야 현금지원제도 개정 전후 비교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분야별 최대 지원한도	- R&D 센터, 국가전략기술: 외국인직접투자(FDI)의 50% - 신성장동력·첨단기술, 소부장: FDI의 40% - 지역본부, 대규모 고용 등: FDI의 30%	- R&D 센터, 국가전략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외국인직접투자(FDI)의 50% - 신성장동력·첨단기술, 소부장: FDI의 40% - 지역본부, 대규모 고용 등: FDI의 30%
국비 분담률	〈신성장·첨단기술, 소부장〉 - 수도권, 국비:지방비 40:60 - 비수도권, 국비:지방비 70:30	〈국가첨단전략기술 상향 가능〉 - 수도권, 국비:지방비 50:50 - 비수도권, 국비:지방비 80:2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3b),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강화 등 투자환경 개선추진」.

현금지원의 경우 조세감면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선진국처럼 협상에 의한 효과적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도입되었다.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로 투자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투자유치 협상력은 상당히 제고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23년 4월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현금지원제도를 개편하기도 했다.³⁸⁾

이러한 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현금지원 연간 규모가 500억 원에 불과하다는 한계 때문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는 외국인투자자에게 한국행을 유도하는데 인센티브 측면에서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못하고 있다. 한편 현금지원 인센티브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에 따라서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금액 수준에 고용창출 규모가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점도 첨단전략산업 투자유치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우 자본집약도가 매우 높아 고용창출 절대 인원수가 크지 않으므로 고용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현금지원

38)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3b),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강화 등 투자환경 개선추진」.

보조금 수준이 결정될 경우 투자금액 대비 현금지원 수준이 너무 낮게 책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상 우리나라 외국인투자 인센티브의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미국, 일본 및 EU 등의 반도체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사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첨단 전략산업 분야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유치 경쟁에서 우위에 서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하겠다.

2.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

가. 전략산업 투자 인센티브 외국사례 시사점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의 반도체 등 전략산업 분야 투자 촉진 및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의 내용 및 운영 사례 등을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별도의 인센티브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 산업에 대한 자국 내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유치가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인투자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미국, 일본의 경우 투자세액공제 등을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 일본, EU 모두 조세감면보다는 투자보조금 형태의 지원이 투자 인센티브의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거액의 투자보조금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로 제도가 설계되어 있어서, 전략적으로 꼭 필요한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는 데 효과적이다.

셋째, 전략산업에 대해서 국내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대규모 투자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미국, 일본, EU 등 서방

기술 선진국들이 반도체 등 핵심 전략산업에서 기술력 및 공급망 리스크 등으로 악화된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투자 인센티브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선진국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사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여건은 상당히 다른 측면이 많다. 선진국의 경우 전략산업 투자유치를 위해서 거액의 투자보조금 지급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수천억 원에서 심지어 조 단위의 투자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하겠다. 우리나라도 미국, 일본, EU와 같이 첨단전략산업 분야 투자유치 및 투자확대를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비슷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투자세액공제 확대로 연결되기도 했다. 그러나 선진국의 최근 제도 개편에 따른 거액의 투자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미국, 일본 또는 EU 등이 새롭게 채택한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거액의 투자보조금 형태의 인센티브 도입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해외사례의 시사점과 기존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의 현황을 고려할 때, 전략산업 외국인투자 인센티브의 개편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는 대안으로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기존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확충해서 첨단전략산업 외국인투자 유치에 활용하는 것으로, 현행 투자 인센티브 제도 중에서 투자유치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현금지원제도를 확충하는 방안이다. 둘째, 최근 국내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서 도입되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새로운 투자지원제도 중에서 전략산업 외국인투자 유치에 활용될 수 있는 제도를 선별하여 인센티브 내용을 설계하는 방안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투자지원제도로는

2023년 상반기에 입법이 이루어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특화단지’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 ‘기회발전특구’를 들 수 있다. 이 두 개편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현금지원제도 확충 및 개선방안

첨단전략산업 외국인투자를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현행 현금지원제도의 가장 큰 한계인 예산 규모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2023년 4월에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에 대해서 현금지원한도를 투자금액의 50%까지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이 개편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재 500억 원에 불과한 현금지원 예산 규모를 최소한 두 배 이상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금지원이 확충될 경우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의 외국인투자 중에서 투자금액이 비교적 소규모이지만 기술력 등이 탄탄한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유치에 효과적일 수 있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의 전략산업 공급망의 최종 제품단계에 국내 대기업이 포진하고 있지만, 관련 분야 소재·부품·장비 등의 경우 공급망의 중간단계에는 기술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들이 포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금 지원을 확충해서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면 첨단전략산업의 국내 생태계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확대된 현금지원 예산의 사용과 관련, 현금지원의 용도가 시설과 장비 등 자본재 투자와 같은 하드웨어 측면의 투자지출 항목을 넘어, 산학협력을 통한 기초 연구, 시스템 설계, 시제품 테스트 등 고급인력의 활용 및 무형자산의 창출과 연계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측면의 연구개발 지출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금지원제도의 세부 운영 과정에서 첨단전략산업 투자유치 효과 극대화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내용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앞서 현금지원제도의 문

제점 부분에서 지적했듯이 심사 과정에서 현금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이후 현금 지원 금액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 고용창출 규모가 상당한 영향을 주는 부분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즉 첨단전략산업의 높은 자본집중도를 고려할 때, 투자 프로젝트의 직접적인 고용인원 수 이외에 간접적인 고용창출 효과 및 고용의 질 등을 함께 고려하여 현금지원 규모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첨단산업 특화단지 및 기회발전특구 활용방안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2023~27년)’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은 2027년까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에서 550조 이상의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특화단지의 조성, 인력양성 및 연구 개발 등 관련 인프라 조성을 정부가 주도하고, ‘전략산업 특화단지’ 등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³⁹⁾ 현재 ‘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입주기업 지원의 자세한 내용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입주기관(연구기관 및 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및 연구시설 등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기업은 중소 및 중견 기업으로 제한(동법 제21조제7항)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략산업 분야 국내 대기업 또는 해외 대기업의 한국 내 대규모 투자에 ‘전략산업 특화단지’만을 활용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특화단지’는 바로 이어서 설명할 ‘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해서 첨단전략산업 투자유치에 활용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집적 효과에 따른 긍정적 외부효과를 저해할 수준의 지역 간 경쟁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우려는 크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각종 특구가 각 지역에 존재하지만 해당 지역 내 특구 간 연계성이 떨어져 집적효과를 가져오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기회발전특

39)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3c),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총력대응 시작」.

구와 같은 제도를 통해서 특구 간 연계성 강화 및 기업투자 활성화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기존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하여 2023년 5월에 제정된 법률로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을 목표로 한다. 동 법률에서 새롭게 도입된 투자지원제도가 바로 ‘기회발전특구’인데, 이는 지방에 대한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지역이다. 동 법 제22조에서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국세 또는 지방세의 감면을 정하고 있다. 이 ‘기회발전특구’는 기본적으로 국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에 대해서 지정될 수 있으며, 앞서 언급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특화단지’가 국가산업단지 형태로 조성된다는 점에서⁴⁰⁾ 지리적으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포함하는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될 경우 첨단전략산업 분야 대규모 투자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

한편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포함하는 ‘기회발전특구’에서 전략산업 분야의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이에 대한 투자보조금 및 조세감면의 수준을 얼마나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참고할 수 있는 지원은 ‘국내복귀투자지원’이라고 하겠다. ‘국내복귀투자지원’의 경우 투자보조금 지원과 법인세 감면이 제공되는데 그 수준은 보조금 및 조세감면 모두에서 현행 국내 투자지원 인센티브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투자보조금의 경우 기업당 최대 600억 원이 지원될 수 있다. 조세감면의 경우 7년(5년 100%, 2년 50% 감면)으로 현재도 가장 높은 수준인데, 2023년 세제개편안에서는 최대 10년(7년 100%, 3년 50% 감면)이 제시되어 있다.⁴¹⁾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대규모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국내복귀투자지원’에 준하는 수준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 엄격한 투자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다. 핵심

40)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3d),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다진다」.

4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3. 7. 2), 「2023년 세법개정안」.

적인 투자 요건은 첨단전략산업 분야 중 외국기업의 투자가 기존 국내 기업의 대체 투자를 제약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해야 할 것이다. 즉 해당 외국인투자가 첨단전략산업의 국내 생태계 구축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국내 기업이 수행하기 어렵고 단기간 내에 기술 캐치업도 어려울 정도로 독보적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요건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국내복귀투자지원’에 준하는 지원을 해줄 충분한 당위성이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국문자료]

- 곽기현, 여영준, 정성문. 2017. 「투자 보조금 지급과 세제 혜택이 기업의 R&D 투자 의사 결정에 미치는 효과 - R&D 투자비용 불확실성을 고려한 실물업선 모형 접근법 -」. 『한국혁신학회지』, 제12권 제4호, pp. 131~153.
- 김규판. 2022. 「미·중 기술패권 경쟁 하에서 일본의 투자유치 동향」. 2022년 2차 투자정책 포럼 발표자료. (11월 4일)
- 김준동, 강준구, 김혁황, 김민성, 이성봉. 2009.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투자환경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09-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문외솔, 송승주. 2020. 「베이지언 기법 추정의 DSGE 모형을 이용한 고용보조금정책효과」. 『노동경제논집』, 제43권 제3호, pp. 63~100.
- 산업통상자원부. 2021a. 『외국인직접투자통계 통계정보보고서』.
- 예상준, 김혁황, 박단비, 최혜린. 2021. 『디지털세가 다국적기업의 해외 투자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 21-2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오종혁. 2022. 「중국, 제조업 분야의 외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 발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 동향세미나. (11월 7일)
- 정승용, 임종빈, 정상양. 2017. 「중소기업의 기술수준과 R&D 투자역량에 따른 정부 보조금 지원효과 분석」. 『산업혁신연구』, 제33권 1호, pp. 65~85.
- 정형곤, 이아라. 2022. 『주요 선진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변화와 시사점』. 연구자료 22-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주벨기에대사관. 2021. 『Invest EU 프로그램 주요 내용』.
- 코트라. 2022. 「중국 新 외국인투자장려산업목록, 2023년 1월 1일부 시행」. (11월 8일). 해외시장뉴스.
- 한국은행. 2022. 「외국기업 투자 장려산업 목록 확대에 대한 평가」. 현지정보 상해주재원. (11월 22일)
- 허난이, 박수령, 문희은. 2022.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주요 내용과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Special Issue Brief』. (8월)

[일문자료]

內閣部 對日直接投資推進會議. 『對日直接投資促進戰略』, 2021. 6. 2.

[영문자료]

- Brautzsch, Hans-Ulrich, Jutta Günther, Grigitte Loose, Udo Ludwig, and Nichole Nulsch. 2015. "Can R&D subsidies counteract the economic crisis? - Macroeconomic effects in Germany." *Research Policy*, 44(3), pp. 623-633.
- Brown, Allesio J.G., Christian Merkl, and Dennis J. Snowden. 2011. "Comparing the effectiveness of employment subsidies." *Labour Economics*, 18, pp. 168-179.
- Cerqua, Augusto and Guido Pellegrini. 2022. "Decomposing the employment effects of investment subsidies." *Journal of Urban Economics*, 128, 103408. Elsevier.
- Chor, Davin. 2009. "Subsidies for FDI: Implications from a model with heterogeneous firm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78(1), pp. 113-125.
- Cronert, Alex. 2019. "Varieties of Employment Subsidy Design: Theory and Evidence from Across Europe." *Journal of Social Policy*, 48, 4, pp. 839-859.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elvic, Uros. 2020. "Employment and state incentives in transition economies: Are subsidies for FDI ineffective? The case of Serbia." *Transnational Corporations*, 27(2), pp. 31-63.
- European Commission. 2020. "A New Industrial Strategy for Europe." COM(2020).
- _____. 2022a. "Digital sovereignty: Commission proposes Chips Act to confront semiconductor shortages and strengthen Europe's technological leadership." European Commission - Press release. (February 8)
- _____. 2022b. "State aid: Commission approves €292.5 million Italian measure under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to support STMicroelectronics in construction of a plant in the semiconductor value chain." European Commission - Press release. (October 5)

- _____. 2023. "Commission welcomes political agreement on the European Chips Act." European Commission - Press release. (April 8)
- Guo, Yan and Haochen Zhang. 2022. "Spillovers of innovation subsidies on regional industry growth: Evidence from China." *Economic Modelling*, 112, pp. 1-18. Elsevier.
- Kim, Hyejin and Jungmin Lee. 2019. "Can employment subsidies save jobs? Evidence from a shipbuilding city in South Korea." *Labour Economics*, 61, 101763.
- Mulier, Klaas and Ilia Samarin. 2021. "Sector heterogeneity and dynamic effects of innovation subsidies: Evidence from Horizon 2020." *Research Policy*, 50(10), 104346.
- Wu, Yen-Chen, Shikuan Chen, and Ming-Jen Chang. 2019. "Foreign direct investment subsidy in a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 with heterogeneous firms." *Review of International Economics*, 27(5), pp. 1427-1459.
- Yeldan, A. Erinc. 2017. "Turkey's employment subsidy program under the great recession: a general equilibrium assessment."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Economics*, 31(2), pp. 225-254.

[언론 및 보도자료]

- 기획재정부. 2023. 「2023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7월 27일).
- 김태영. 2022. 「日, TSMC 구마모토 반도체 공장 승인...최대 4조5000억원 지원」. 『서울경제신문』. (6월 18일). <https://www.sedaily.com/NewsView/267AL16FF6>(검색일: 2023. 6. 13).
- 김현정. 2021. 「한신평 SK E&S, 상환전환우선주 발생으로 재무지표 개선 전망」. 『파이낸셜뉴스』. (10월 23일). <https://www.fnnews.com/news/202110232159243979>(검색일: 2023. 6. 13).
- 박낙희. 2023. 「전기차 7500불 크레딧 모두 미국차」. 『LA중앙일보』. (4월 18일). <https://news.koreadaily.com/2023/04/17/economy/car/20230417184949031.html>(검색일: 2023. 7. 30).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4. 「2013년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 145.5억불, 도착 96.8억불」. (1월 29일)
- _____. 2016. 「2015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신고 209.1억 달러, 도착 159.5억

- 달러 기록」. (1월 6일)
- _____. 2017. 「2016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1월 3일)
- _____. 2018. 「2017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1월 3일)
- _____. 2020. 「2019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1월 6일)
- _____. 2021b. 「2020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1월 11일)
- _____. 2021c. 「2021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7월 7일)
- _____. 2023a. 「2022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1월 3일)
- _____. 2023b.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강화 등 투자환경 개선추진」. (4월 27일)
- _____. 2023c.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총력대응 시작」. (5월 26일)
- _____. 2023d.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다진다」. (6월 6일)
- 이영희. 2022. 「반도체에 사할 건 다, 키옥시아에 9천억원 지원…“1위 삼성에 대항”」. 『중앙일보』. (7월 27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0048#home>(검색일: 2023. 6. 23).
- 이현일. 2023. 「美마이크론, 2조 보조금 받아 일본서 첨단 반도체 생산」. 『한국경제신문』. (5월 18일).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305183423i>(검색일: 2023. 6. 23).

[온라인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http://www.motie.go.kr/motie/py/sa/investstatse/investstats.jsp>(검색일: 2023. 5. 25).
- 일본 경제산업성. 5G 도입촉진세제. <http://www.motie.go.kr/motie/py/sa/investstatse/investstats.jsp>(검색일: 2023. 7. 23).
- Congress.gov. “CHIPS and Science Act of 2022.” Public law No. 117-167. <https://www.congress.gov/117/plaws/publ167/PLAW-117publ167.pdf>(검색일: 2023. 7. 16).
- Eicon. <http://eikon.thomsonreuters.com/index.html>(검색일: 2023. 6. 1).
-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Chips Acts.”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european-chips-act>(검색일: 2023. 7. 1).
- fDi Markets. <https://www.fdimarkets.com/>(검색일: 2023. 6. 7).
- UNCTADstat. Data Center. <https://unctadstat.unctad.org/wds/TableViewer/tableView.aspx>(검색일: 2023. 6. 1).



부록 표 1. 주요국의 GDP 대비 FDI 유량(flow)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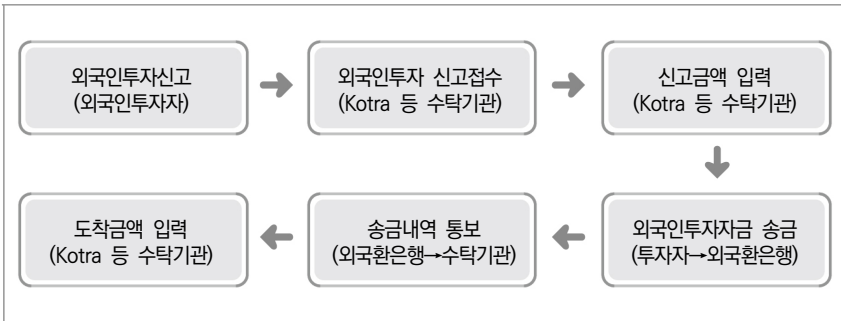
국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한국	0.8	0.8	0.7	0.9	0.6	0.3	0.8	1.1	0.7	0.6	0.5	0.9
한국 순위	162	174	169	158	171	172	155	153	164	164	151	146
G7	1.1	1.3	1.0	1.1	0.9	1.9	2.3	1.4	1.3	1.1	0.6	1.3
미국	1.3	1.5	1.2	1.2	1.1	2.6	2.4	1.6	1.0	1.0	0.7	1.6
일본	0.0	0.0	0.0	0.0	0.2	0.1	0.4	0.2	0.2	0.3	0.2	0.5
영국	2.3	1.6	2.0	1.8	0.8	1.3	9.5	3.6	3.0	1.6	0.7	0.9
EU	2.3	2.8	2.2	2.1	1.8	4.6	2.5	1.9	2.3	2.6	1.4	0.8
프랑스	0.5	1.1	0.6	1.2	0.1	1.9	0.9	1.0	1.5	1.0	0.2	0.5
독일	1.9	1.8	0.8	0.3	-0.1	0.9	0.5	1.3	1.8	1.4	1.7	0.7
G20	1.8	1.9	1.6	1.6	1.5	2.4	2.3	1.6	1.5	1.5	1.0	1.3
중국	1.9	1.6	1.4	1.3	1.2	1.2	1.2	1.1	1.0	1.0	1.0	1.0
인도	1.6	1.9	1.3	1.5	1.7	2.1	1.9	1.5	1.5	1.7	2.4	1.4
대만	0.6	-0.4	0.6	0.7	0.5	0.4	1.8	0.6	1.2	1.3	0.9	0.7
ASEAN	5.7	3.8	4.8	4.8	5.1	4.8	4.4	5.5	4.9	5.5	4.1	5.4
전 세계	2.1	2.2	2.0	1.9	1.8	2.8	2.7	2.0	1.7	1.7	1.1	1.6

주: 1) 음영은 한국보다 비율이 낮은 국가를 표시함.

2) 투자유치보다 회수가 많은 경우 비율이 음(-)으로 계산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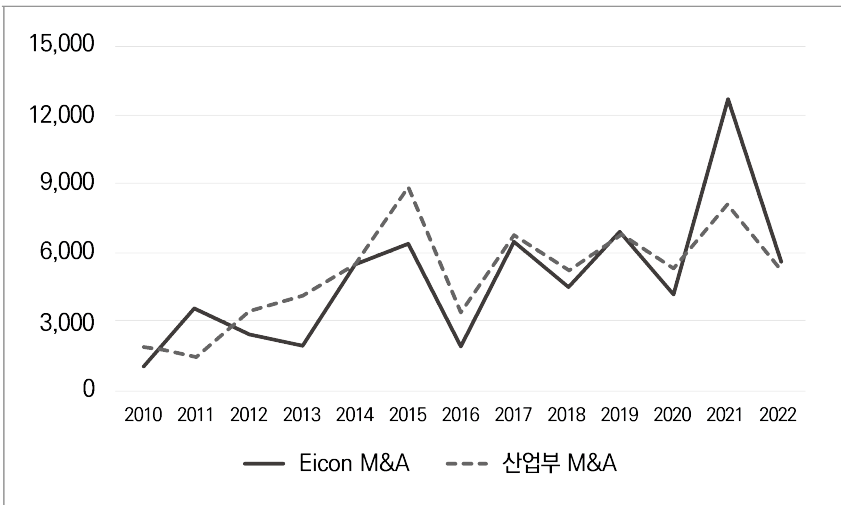
자료: UNCTADstat, Data Cente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3. 6. 1).

부록 그림 1.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통계 작성 흐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21a), pp. 2~3.

부록 그림 2. 자원원별 우리나라의 M&A형 투자 추이 비교



주: Eicon M&A는 국경간 M&A 중 피인수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한 거래만을 대상으로 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3. 5. 25) 및 Eic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3. 6. 1).

Reforming Incentive Policies to Increase FDI in Korea's Strategic Industries

June Dong Kim, Seong-Bong Lee, and Hyuck-Hwang Kim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in Korea remains at a lower level compared to that of major countries, although the amount of FDI in Korea in 2022 on notification basis exceeded 30 billion USD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And major advanced countries have recently expanded investment incentives to strategic industries such as semiconductors and secondary batteries. Therefore, we need to make a landmark transformation of our FDI incentive policies. In this regard, this study first took a look at the recent trends of FDI in Korea and reviewed the incentive systems for attracting strategic investment in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S., the EU, Japan, and China. And then it attempted to present policy directions for reforming incentive systems to attract strategic investment to Korea. In particular, it aimed to present the improvement of the cash incentive system as well as the use of specialized complexes for advanced industries and specialized zones for equal opportunity development.

First, by looking at the recent trends of FDI into Korea (2010~2022),

there are more FDI from advanced countries and tax haven countries such as U.S.A., Japan, Singapore, Malta, Netherland than from others. Also, we found more FDI in services industry than in manufacturing industry. Finally, there were more greenfield FDI than M&As.

Next, we investigated recent incentive systems to attract investment in strategic industries in some key countries. These include the CHIPS and Science Act along with 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the U.S., and the European New Investment Strategy, InvestEU Program, and European Chips Act in the EU. We also analyzed Japan's Direct Investment Promotion Strategy toward Japan, Promotion Act of 5G, Semiconductor Fund, and Green Innovation Fund, as well as China's FDI expansion policy in the manufacturing sector. From this investigation, we confirmed that major countries (i) operate investment incentive systems without any discrimination between foreign and domestic firms, (ii) provide large amounts of investment subsidies, and (iii) have formed a social consensus that large-scale assistance is necessary to attract investment in strategic industries.

Based on these characteristics in major countries, we presented the improvement of cash assistance system as well as the use of specialized complexes for cutting-edge industries and equal opportunity development special zones as policy directions for reforming incentives to attract investment in domestic strategic industries. More specifically, in the case of improving the cash subsidy system, we found that the following measures are necessary:

(i) increasing the budget available for cash subsidies, (ii) increasing the R&D subsidy expenditures in the aspect of software, (iii) and calculating the amount for cash assistance taking into account the quality of employment, not to mention the effect of job creation. Finally, we presented a plan for linking specialized complexes for cutting-edge industries and special zones for equal opportunity development in order to provide unprecedented support for the large-scale investments in strategic industries.

〈책임〉

김준동

미국 University of Chicago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역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다자통상협력관 역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 신통상전략팀 선임연구위원
(現, E-mail: jdkim@kiep.go.kr)

저서 및 논문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및 대외경제 협력 방안』(공저, 2021)
『D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 평가와 시사점』(공저, 2022) 외

〈공동〉

이성봉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졸업
독일 만하임대학교 경영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임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現, E-mail: sblee@swu.ac.kr)

저서 및 논문

『국제경영』(2021)
『GVC 재편과 연구개발 지원세제의 개편방안』(『조세논총』, 제6권 제1호, 2021) 외

김혁황

송실대학교 경제학 석사
고려대학교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 무역투자정책팀 선임연구위원
(現, E-mail: hhkim@kiep.go.kr)

저서 및 논문

『한국의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 방안 연구』(공저, 2022)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공저, 2022) 외

KIEP 연구자료 발간자료 목록

■ 2023년

- 23-01 외국인 직접투자가 베트남의 성별 임금 격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김제국
- 23-02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투자 동향과 국내 규제 분석 / 이규엽·엄준현
- 23-03 동지중해 천연가스 개발 현황과 한국의 협력 방안 / 유광호·이지은
- 23-04 동남아·대양주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주의 성향 연구와 시사점: 필리핀, 태국, 호주,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 김남석
- 23-05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분석과 시사점 / 김준동·고준성·강준구
- 23-06 디지털 정책과 규제 변화 분석: Digital Policy Alert 통계를 중심으로 / 김지현
- 23-07 국내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 / 김준동·이성봉·김혁황

■ 2022년

- 22-01 일본 디지털전환 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 김규판
- 22-02 주요 선진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변화와 시사점 / 정형곤·이아라
- 22-03 Global Supply Chains in a Post-Covid Multipolar World: Korea's Options / Shahid Yusuf and Danny Leipziger
- 22-04 D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 평가와 시사점 / 김준동
- 22-05 중국의 녹색금융 발전전략과 주요 내용 / 문지영·이효진
- 22-06 방글라데시 기후변화 영향 분석 및 시사점 / 노윤재·김민희·김소은
- 22-07 국내외 ESG 평가사별 점수 비교: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 박지원·이예림
- 22-08 시진핑 3기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 과제와 시사점: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 양평섭·김홍원
- 22-09 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관한 글로벌 규범 현황과 시사점 / 이천기
- 22-10 한-호주 공급망 협력 방향: 핵심광물과 수소를 중심으로 / 조승진·신민이
- 22-11 대러시아 제재가 중동부유럽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이철원·김초롱
- 22-12 미중 전략경쟁 시기의 대만 문제와 한국의 경제안보 / 허재철
- 22-13 국제사회의 성평등 무역규범 도입 현황과 한국의 정책과제 / 오수현·고보민

- 22-14 최근 Mega FTA SPS 규범의 국제 논의 동향 및 시사점 / 강민지
- 22-15 무역 자유화와 소비자 후생효과: 품질 다양성을 중심으로 / 정 철·김봉근·정민철
- 22-16 국제사회의 산업부문 탄소중립 추진 동향과 대응방향: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 김은미·이성희
- 22-17 국제분쟁과 경제적 상호의존성: 경제안보에 대한 시사점 / 박영석
- 22-18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주요국의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 분석 / 김윤정·임유진

■ 2021년

- 21-01 유럽 친환경자동차산업 정책분석과 시사점: e-모빌리티를 중심으로 / 이현진·이철원·윤형준
- 21-02 디지털전환 시대의 국경간 전자조달 논의동향과 시사점 / 박지현
- 21-03 미·중 마찰의 주요 쟁점과 한·중 경제협력 방향 / 양평섭·최지원
- 21-04 북한 대외 채무의 쟁점과 과제: 국제 규범과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 최유정·한하린
- 21-05 미국의 스위스 환율조작국 지정 원인 분석 및 평가 / 조동희·오택현·이현진
- 21-06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방안 연구 / 박혜리·박지현
- 21-07 코로나19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 박순찬
- 21-08 미국과 EU의 농업보조 변화와 정책 시사점 / 서진교
- 21-09 유럽 주요국 녹색당의 성공 및 실패 요인 분석 / 조동희·장영욱·이현진·윤형준
- 21-10 인도네시아 탄소 중립 대응정책과 한국의 그린뉴딜과의 협력방안 / 이재호

■ 2020년

- 20-01 중국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 구축과 사례연구 / 김홍원·김주혜
- 20-02 일본의 개방형 혁신전략: 산학협력을 중심으로 / 정성춘
- 20-03 중국의 사이버보안 정책 연구 / 박민숙·이효진
- 20-04 디지털세 논의에 관한 경제학적 고찰 / 이규엽·김현수
- 20-05 EU GDPR 위반사례의 분석과 시사점 / 이규엽·엄준현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전문가, 기업 및 일반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를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East Asian Economic Review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 기획성과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414-1179 FAX: 044) 414-1144
 E-mail: sgh@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에 가격인상과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란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 관 회 원 ☐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개 인 회 원 ☐		
연 구 자 회 원 ☐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



Reforming Incentive Policies to Increase FDI in Korea's Strategic Industries

June Dong Kim, Seong-Bong Lee, and Hyuck-Hwang Kim

본 연구에서는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최근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현금지원제도 확충 및 개선'과 '첨단산업 특화단지 및 기회발전특구 활용'을 국내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선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현금지원제도 확충 및 개선 방향의 경우 현금지원 예산 규모의 확대, 소프트웨어 측면의 연구개발 지출에 대한 지원 확대, 고용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을 함께 고려한 현금지원 규모 산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함께 전략산업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첨단산업 특화단지와 기회발전특구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ISBN 978-89-322-2507-4
978-89-322-2064-2(세트)

정가 5,000원